

|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February 2015 vol.119

이달의 이슈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양미선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김상호

생생리포트

'아이조아~서울' 아버지 교육
조경진
인포그래픽스
서울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는?
서울경제분석센터

경제동향

생산/소비/고용/물가
부동산/금융/수출입
경제통통
FOCUS/ZOOM IN
HOT ISSUE/PHOTO@NEWS
김기영

02

서울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는?

서울 사회서비스 종사자 월평균 급여는 206만원으로 서울 전체 월평균 급여 320만원 보다 114만원 적은 것으로 조사됨
사회서비스 직종의 급여는 대체로 정규직 비중이 클수록 높고, 비정규직 비중이 클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 사회서비스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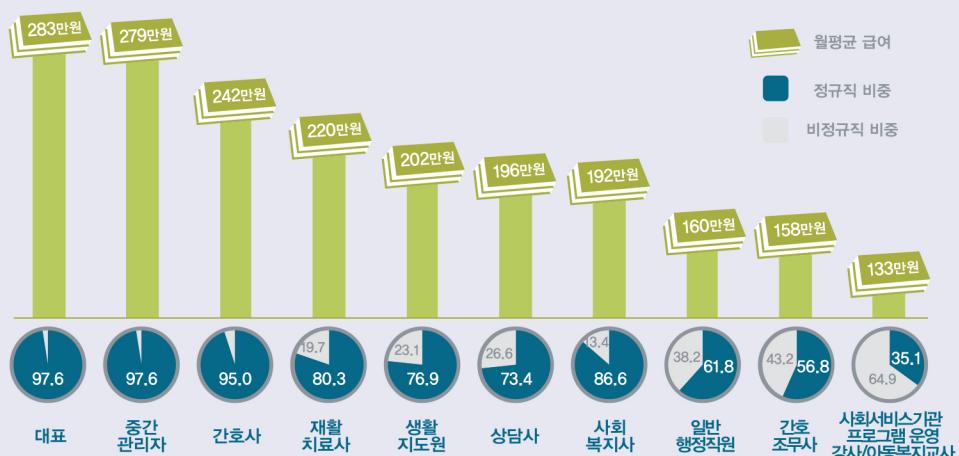


서울 전체 종사자



서울 사회서비스 직종별 종사자

주: 월급여액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 + 초과급여
(상여급과 특별급여는 제외)
자료 : 2014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서울경제

2015 vol.119

2

- 이달의 이슈** 3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양미선(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15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생생리포트** 27 ‘아이조아~서울’아버지 교육
조경진(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선임보육전문요원)

- 인포그래픽스** 41 서울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는?
박희석(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장윤선(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 경제동향** 47 요 약
49 생 산
51 소 비
52 고 용
55 물 가
56 부동산
58 금 융
66 수출입
곽지원(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정의영(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 경제통통** 73 FOCUS/ZOOM IN/HOT ISSUE/PHOTO@NEWS
김가영(서울특별시청 경제진흥본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msyang@kicce.re.kr

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육아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 분야에서의 국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2,700개소로 늘리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도 2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5개년(2006~2010년) 중장기 보육 계획 「새싹플랜」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를 30%까지 늘린다는 「새로마지플랜 2010」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은 2005년 1,352개소에서 2008년 1,826개소로 늘어나는 비약적인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된 2차 중장기 보육계획 「아이사랑플랜 2009-2012」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보다 민간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경희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 최근 연구: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2014),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2014) 등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의 질 향상과 취약지역 중심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 감소로 정책 방향이 선회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5%, 이용 아동수도 10%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선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를 위해서는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며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입소 신청자는 2014년 7월 말 기준 총 46만 3,188명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영유아 인구가 밀집해 있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22만 2,917명, 10만 226명으로 전체 대기자의 70%에 달하고 있어 수도권 적체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어린이집 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 4,702개소에 대기자는 22만 882명,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38,128개소에 23만 5,986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가정 어린이집보다 7.8배나 대기자가 많다(세계일보, 2014년 10월 14일 기사). 또한 2012년부터 시행한 0~2세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의 수급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렇듯 영유아 부모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저렴한 보육료가 가장 큰 이유였으나, 최근에는 0~2세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등의 보육료 지원 확대로 경제적인 측면보다 국가가 어린이집을 직접 관리하고 보육서비스 질이 높으며,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의 질이 보장되었다는 점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기본 방향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민간시설이 진입을 기피하는 농어촌 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서문희·신나리·유은영, 2007; 신나리·이정원·송신영·이은경, 2009).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50%에 달하고(통계청, 2013),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이용 부모의 다양한 보육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환경 마련 방향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요공급 추이와 중앙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규모 및 예산을 먼저 살펴본 후 서울시의 관련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국공립어린이집 수요·공급 추이

1) 국공립어린이집 수

국공립어린이집은 2013년 말 기준 2,332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5.3%를 차지한다. 전체 어린이집 수는 2000년 19,276개소에서 2013년 43,770개소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증가율에 못 미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06년 정부의 보육 공공성 확대 정책과 맞물려 증가율이 11.5%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2007년 이후에는 매년 4~6% 선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반해, 민간어린이집은 2000년 8,970개소에서 2013년 14,751개소로 늘어났고, 가정어린이집은 6,473개소에서 23,632개소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가정어린이집은 2005년 도입된 기본보육료와 시설환경개선 융자금 지원, 2012년 0~2세 무상보육, 민간 어린이집은 2012년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처럼 민간 부문의 급격한 확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은 여전히 5%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를 확충하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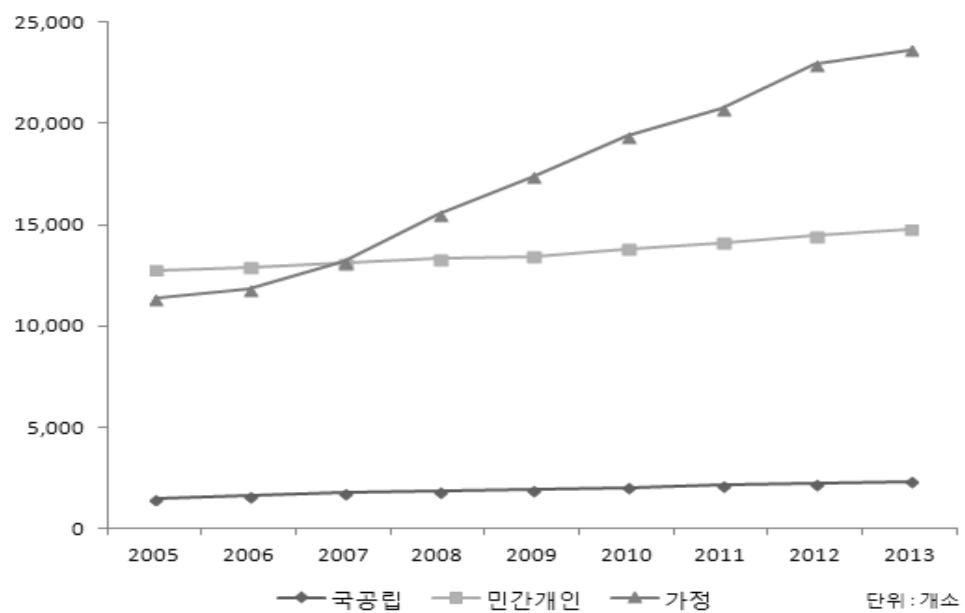
〈표 1〉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수: 2000~2013년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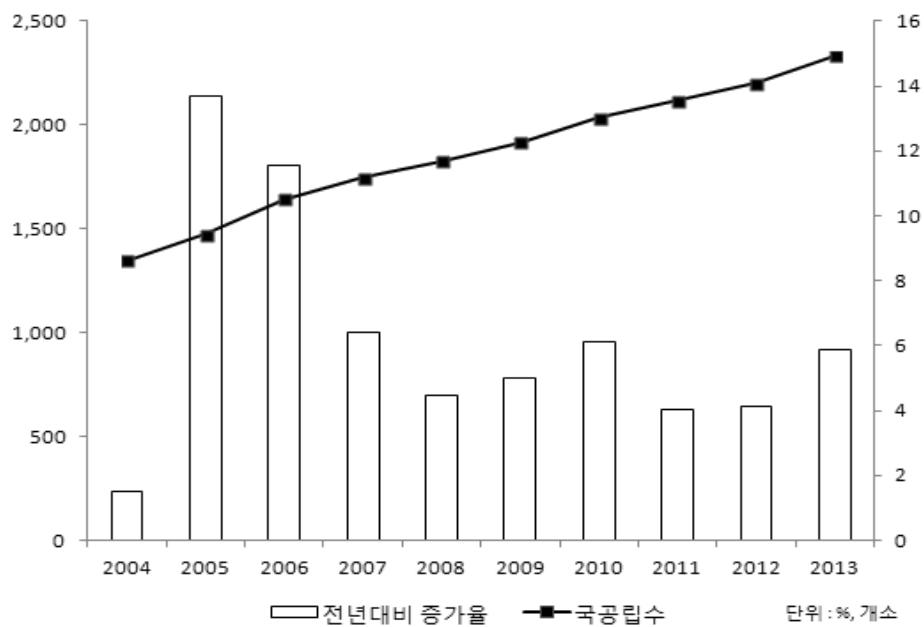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
2000	19,276	1,295	2,010	324	8,970	6,473	204	미분류
2005	28,367	1,473	1,495	979	12,769	11,346	263	42
2006	29,233	1,643	1,475	1,066	12,864	11,828	298	59
2007	30,856	1,748	1,460	1,002	13,081	13,184	320	61
2008	33,499	1,826	1,458	969	13,306	15,525	350	65
2009	35,550	1,917	1,470	935	13,433	17,359	370	66
2010	38,021	2,034	1,468	888	13,789	19,367	401	74
2011	39,842	2,116	1,462	870	14,134	20,722	449	89
2012	42,527	2,203	1,444	869	14,440	22,935	523	113
2013	43,770	2,332	1,439	868	14,751	23,632	619	129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각 연도, 각 연도 보육통계

이달의 이슈



<그림 1> 어린이집 증가 추이



<그림 2> 국공립어린이집 전년대비 증가율

2)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2013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5만여 명으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약 10.4%에 해당한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00년 686,000명에서 2013년 약 15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2000년 99,666명에서 2013년 154,465명으로 50% 정도가 증가하였다. 한편, 민간 개인과 가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앞서 살펴본 어린이집 증가와 함께 민간 개인은 2배, 가정어린이집은 6배 정도 늘어났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1.3%에서 2012년 10.1%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민간 부문 점유율은 2005년 68.9%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2년 76.6%까지 늘어났으나 2013년 76.3%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2013년까지 0세~2세에게 제한적으로 지원하던 양육수당이 0세~5세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0세~1세의 어린이집 이용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표 2〉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아동 수: 2000~2013년

(단위: 명)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민간 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
2000	686,000	99,666	157,993	15,949	336,625	67,960	7,807	미분류
2005	989,390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12,985	933
2006	1,040,361	114,657	120,551	58,808	582,329	148,240	14,538	1,238
2007	1,099,933	119,141	118,211	55,906	612,484	177,623	15,124	1,444
2008	1,135,502	123,405	113,894	53,818	615,647	210,438	16,809	1,491
2009	1,175,049	129,656	112,338	52,718	623,045	236,843	18,794	1,655
2010	1,279,9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21,901	1,898
2011	1,348,729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4,987	2,286
2012	1,487,361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881	2,913
2013	1,486,980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4,479	3,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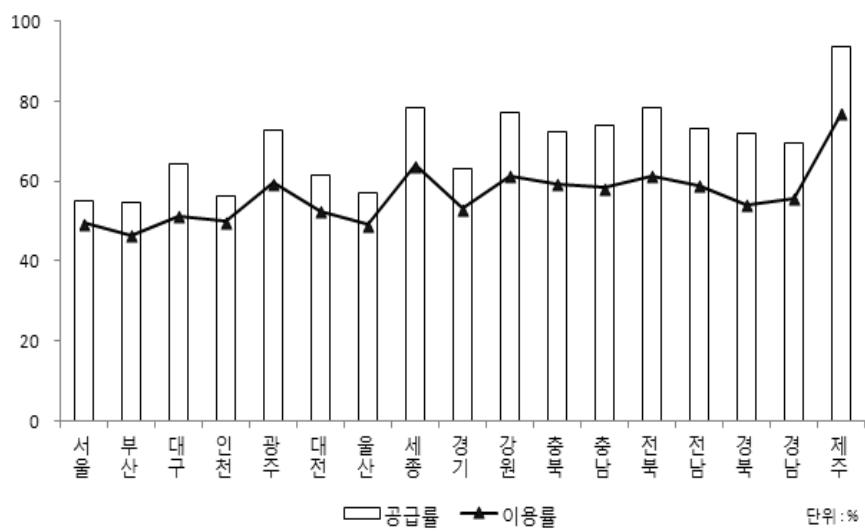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각 연도, 각 연도 보육통계

3) 국공립어린이집 공급과 이용

2013년 0세~5세 영유아 인구수 대비 어린이집 공급률은 64.4%, 이용률은 53.7%로 나타나 영유아 수에 비해 어린이집이 10%p 정도 과잉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급률이 6.1%, 이용률이 5.6%로 공급률과 이용률 간 차이가 0.5%p로 공급만큼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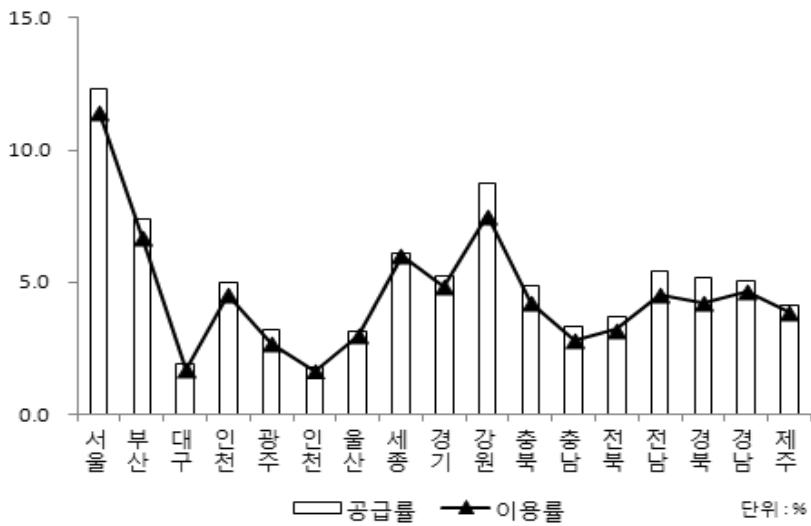
이를 사도별로 보면, 지역차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공급률은 제주가 93.8%로 가장 높고, 부산이 46.6%로 가장 낮다. 이용률도 마찬가지로 제주가 가장 높고 부산이 가장 낮다. 반면에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은 서울이 12.3%로 가장 높지만 대구, 인천이 1% 대로 서울의 1/10 수준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도 공급률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한편, 어린이집 정원과 현원을 이용한 정원충족률을 산출하면, 전체 어린이집이 83.4%이고, 사도별로는 80% 내외 수준을 나타낸다. 특히 서울과 인천의 정원충족률은 90% 가까이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이 90.8%로 전체 어린이집보다 7%p 이상 높으며, 사도별로는 강원이 99.2%로 100%에 육박하고, 나머지 지역들도 80~90%대로 전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자료: 보건복지부, 2013, 보육통계; 행정안전부, 2013, 주민등록인구

[그림 3] 전체 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자료: 보건복지부, 2013, 보육통계; 행정안전부, 2013, 주민등록인구

[그림 4]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규모와 예산

중앙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수는 2008년 91개소였으나 2010년에는 1/3로 줄어든 30개소가 확충되었고, 사업량은 매년 30개소 정도를 유지하였다. 설치 예산도 2008년 115억 원에서 2010년 27억 원으로 1/4 수준으로 줄었고, 2012년까지 이 선을 유지하였다. 전체 보육예산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도 마찬가지로 2008년 0.82%에서 2010년 이후 0.1% 선을 유지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국공립 신축,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3 가지 형태로 추진되었다. 2008년에는 주로 신축 위주이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은 10개소 정도를 유지하고, 신축보다 지원단가가 낮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중심으로 확충이 이루어졌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실적을 올리는 데에는 이점이 있으나 정원 규모가 작아 보육 공급률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사업량이 이전보다 3배 많

은 96개소로 늘어났고, 사업 예산도 5배 이상 증가하였다. 확충 방식도 공동주택 리모델링보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중심으로 추진되어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량을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표 3〉 중앙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수 및 예산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사업량	예산										
전체	91	11,575	82	9,058	30	2,695	30	2,695	31	2,933	96	15,800
국공립 신축	50	9,911	38	7,532	10	1,982	10	1,982	10	1,982	75	14,849
장애인 아동 전담신축	3	714	2	476	1	238	1	238	2	476	2	476
공동주택 리모델링	38	950	42	1,050	19	475	19	475	19	475	19	475
보육예산 대비비율	-	(0.82)	-	(0.53)	-	(0.13)	-	(0.11)	-	(0.10)	-	(0.38)

주: 보육예산은 국고지원 예산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2012,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2013, 2013 보육정책 참고자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정체기라고 할 수 있는 2010~2012년에는 국가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 사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올리고, 부모에게 직접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육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농산어촌이나 저소득밀집지역 등의 취약지역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체 모델인 공공형어린이집¹⁾을 도입하여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 중심의 보육정책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채 양적 팽창만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보조금 부정 수급, 특별활동 및 급간식비 리베이트, 아동 및 보육교직원 허위 등록, 건강·영양·안전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게다가 최근 인천에서 일어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와 같은 극단적인 사건들이 어린이집 내에서 반복적으로 일

1)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어린이집 등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 6월 말 기준 전국 1091개소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예산은 2011년 7,984백만원→2012년 16,942백만원→2013년 33,379백만 원으로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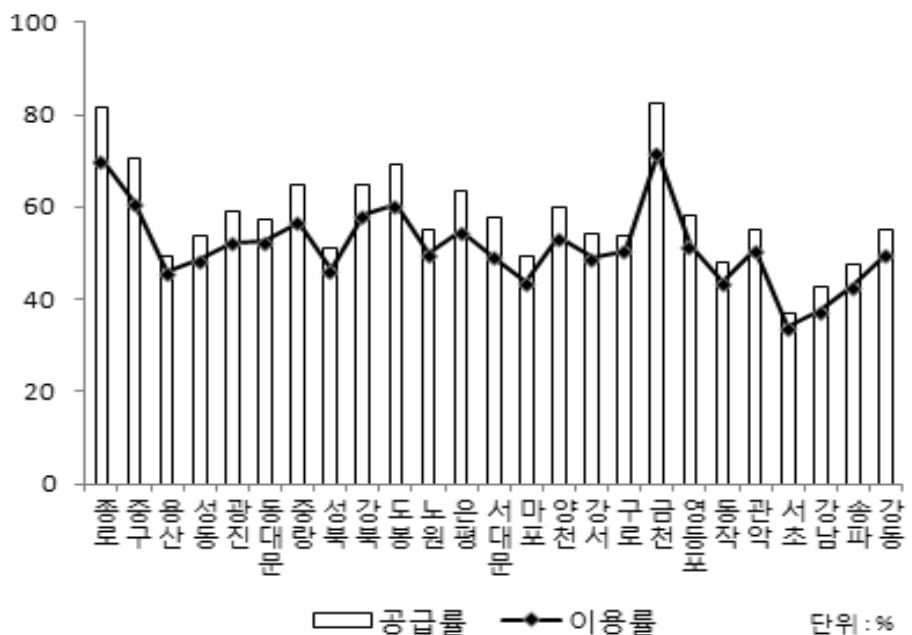
어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매년 150개소씩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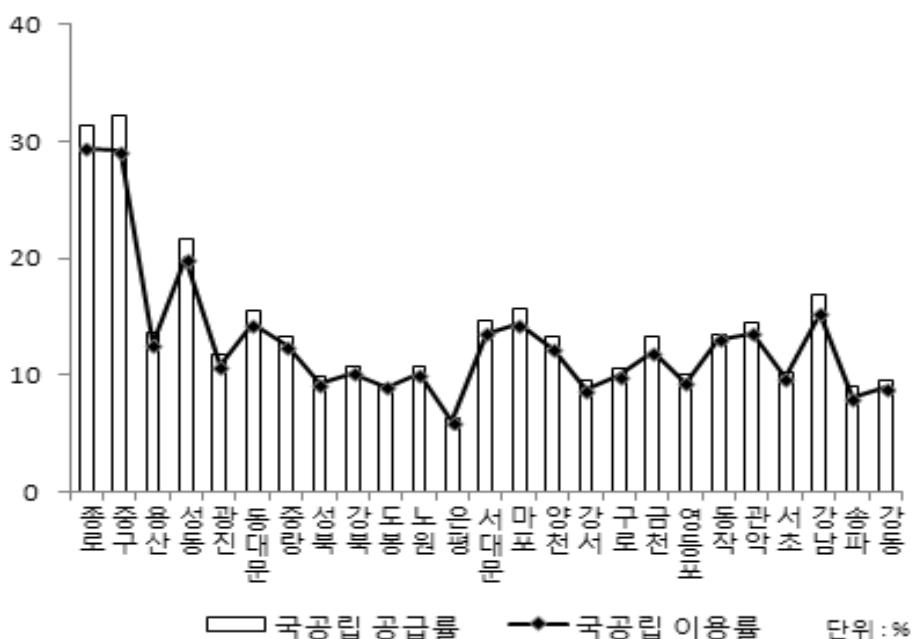
1) 국공립어린이집 공급과 이용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은 2013년 말 기준 750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6,742개소 중 11.1%를 차지한다. 이를 자치구별로 보면,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가 32.0%로 국공립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은 중구 27.7%, 성동구 24.2%, 강남구 21.4% 순이며, 나머지 구는 10% 내외 수준이다. 특히 노원, 도봉, 은평 등 3개 구는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이 5~6%대로 앞서 살펴본 중구나 성동구, 강남구의 1/4 수준으로 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 간 차이가 매우 크다.

서울시 0세~5세 영유아 인구수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공급률과 이용률을 산출하면, 공급률은 55.2%, 이용률은 49.6%로 자치구별 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을 [그림 6]에 제시하였다. 자치구 중 금천구와 종로구의 공급률과 이용률이 70~80%대로 높고, 서초구 가 30% 대로 가장 저조하다. 이에 반해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률과 이용률은 각각 12.3%, 11.5%로 전체 어린이집의 1/5 수준이다.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와 중구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률과 이용률이 각각 30% 내외로 가장 높고, 은평구가 6%대로 가장 낮다([그림 7] 참조).



[그림 6] 서울시 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그림 7]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한편, 서울시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89.7%이다. 이를 자치구별로 보면, 25개 자치구 중 구로구가 94.0%로 가장 높고, 다음은 용산구 92.6%, 관악구 92.4%, 서초구 91.9%, 동대문구 91.5%, 동작구 91.2% 순이다. 25개 자치구 중 서대문구가 85.5%로 가장 낮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동작구가 96.8%, 은평구가 96.4%로 높고, 강서구와 강남구가 각각 90.3%로 가장 낮다.

2)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2013년 말 기준 770억 원 정도이다. 2011년 22억 원에서 2012년 890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난 이후 700~8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추진에 따라 예산이 크게 늘었다.

〈표 4〉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수 및 예산

(단위: 개소, 억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국공립 수	39	80	100	100
예산	22	890	776	689

자료: 서울시, 각 연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성과계획서

3)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모델

서울시는 보육서비스의 보편적 복지시대를 맞이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인 2012년부터 보육 수요가 있는 서울시의 모든 동에 최소 2개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목표로 2014년까지 약 280개소를 확충하였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신축보다 기존 건물과 공공건물을 활용하였으며, 기업과 종교단체, 개인 등이 소유한 부지와 건물 등을 제공받는 등 민간 협동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외에도 신증축하는 주민센터, 도서관, 각종 복지관 등 공공건축물 건립 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기도 하였다.

또한 박원순 시장이 2014년 재임에 성공하면서 서울시는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5년 150개소에서

2016년 300개소, 2017년 300개소, 2018년 250개소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는 4년간 총 6,3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공동주택 단지 내 확충, 가정·민간어린이집 매입 전환, 공공기관 내 설치, 일반 건물 매입 및 공유지 신축, 민관공동 연대 확충,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확충, 학교 유·휴교실 활용, 도시공원 내 유·휴공간 활용, 방과후 어린이집 전환 등의 방법이 활용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13.7%에서 28%로 확대되고, 정원은 6.5만 명에서 1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담보 측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바람직한 방향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이라는 목표 달성을 급급하기보다 확충으로 인한 문제점, 예를 들어 민간어린이집 무상 임대 시 국공립의 사유화 가능성,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른 재정의 효율성 문제, 종교시설 중심의 민관연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각 연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2013, 2013 보육정책 참고자료.
- 서문희 · 신나리 · 유은영, 2009,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방안」, 여성가족부 육아정책개발센터
- 세계일보, 2014, 어린이집 입소대기자 46만명, 국공립은 더욱 치열(2014년 10월 14일 기사)
- 신나리 · 이정원 · 송신영 · 이은경, 2009, 「취약지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모델 정립 방안」, 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개발센터.
- 양미선, 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여성가족부, 각 연도, 각 연도 보육통계.
- 통계청, 2013, e-나리지표.
- 행정안전부, 2013, 주민등록인구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김상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shkim@auri.re.kr

1. 어린이집 공급현황 및 제도적 문제점

어린이집은 0~5세의 어린이가 부모와 가정을 벗어나 최초로 접하게 되는 공공건축물이자 영유아의 인성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최초의 교육기관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시작된 0~2세 아동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보육과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면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보육환경이 우수하고 시설수준이 양호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대기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 총 대기자 수는 11만 명을 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이루어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연세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 최근 연구 :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설계품질관리 및 의사결정 방안,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등

진 서울시에도 2014년 9월 현재 대기자 수가 9만 8천명에 이르러 입소까지 최장 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¹⁾

또한, 2013년부터는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할 새로운 공간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전무한 읍·면·동이 전국적으로 1,960곳에 이르며 지역별로는 전남 235개, 경북 221개, 경남 209개, 경기 208개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보급 확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한 결과 2012년 12월의 34개 동에서 2014년 12월에는 15개 동으로 그 숫자가 대폭 줄었으며 2018년까지 이를 모두 해소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²⁾

현 정부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말 기준으로 10.1%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정부가 제시한 3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5,71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지구입비를 포함하여 1개소당 건설비를 20억 원으로 추산할 경우 약 6조 5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³⁾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인 부족문제를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말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어린이집 42,527개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은 2,203개로 그 비율은 5.2%에 불과하며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1,487,361명 중 10.1%에 해당하는 149,677명만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어린이집 공급은 가정어린이집이 3.2배 증가한 데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은 1.63배 증가하는데 거쳐 공공부문의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수는 2000년 13.7%에서 2011년 48.6%로 비약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에 시작된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보육과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로 앞으로도 그 증가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1) 연합뉴스, 국공립어린이집 없는 읍면동 전국 1천960곳(2012. 12. 31)

서울시, 보도자료 : 서울시, '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더 늘린다(2015. 1. 14)

2) 연합뉴스, 국공립어린이집 없는 읍면동 전국 1천960곳(2012. 12. 31)

3) 양미선 외, 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203

<표1> 어린이집 이용인원 추이

구 분	0~5세 유아 수(명)	시설 이용 유아 수(명)	비율(%)
2000년	3,969,179	545,263	13.7
2005년	3,166,691	541,603	17.1
2011년	2,777,209	1,348,729	48.6

주: 연도별 교육통계연보에서 재구성

이러한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부족과는 별도로 질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 할 수 있는데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20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가 약 39%를 차지하는 등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다.⁴⁾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시설기준도 최소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도 불명확하다. 시설 기준상의 면적 기준은 영유아 1인당 전용면적 4.29m², 보육실 면적 2.64m², 놀이터 면적 3.5m²(50인 이상 시설)이며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적정면적은 현행 기준면적의 2배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⁵⁾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장 기본적인 적정 건설단가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 건설비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예산 낭비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최근에 발주한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정원 1인당 최소 12.8백만 원~최대 31.4백만 원으로 약 2.45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이러한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현황과 제도적 문제점을 바탕으로 그 양적인 확충과 질적인 향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4) 양미선 외, 전계서, p.140

5) 최경숙 외, 2006, 보육시설 설치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6) 김상호, 2013,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p.4

2.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 방안

1)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을 위해서는 먼저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공공시설물의 신·증축 시에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용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것도 유용하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청사, 주민센터, 도서관, 경찰서 등 공공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때 어린이집을 함께 건설하거나 어린이집 건설에 필요한 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는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부지로 도시 내에 산재한 유휴지 및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도시 내의 방치된 국유지와 시유지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신축 용지로 활용하거나 기존 도시 내의 기능재편 등으로 용도 폐기된 주민센터, 파출소, 보건소 등 공공시설물을 개보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 보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도시 내 유휴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등에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2> 서울시 강남구 학교시설복합화사업 개요

구분	기본 협약	사업비 구성(%)		공사기간	주차장(면)	어린이집 (㎡)	개원일
		구청	교육청				
포이초교	02.08.23	76	24	03.03~05.08	194	289	06.4
언북초교	04.06.18	85	15	05.09~07.10	233	471	08.3
대왕초교	09.12.28	90	10	11.01~13.09	100	436	13.7
신구초교	10.03.23	93	7	11.04~13.11	194	327	13.11
도곡초교	09.12.28	90	10	11.12~13.09	200	389	13.12

주: 서울시 강남구는 강남교육청과의 협약으로 유휴교실이 발생한 초등학교에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주차장 등 편의시설과 구립어린이집을 함께 건설하는 학교복합화사업을 추진

도시공원의 미활용, 저이용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중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2) 매입전환·기부채납 등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공급확대

공공 임대아파트의 복리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것은 LH와 SH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복리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며 서울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원 조례 제12조 ②항에 이미 관련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기부채납 등 민간의 공의사업과 연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보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민간건축물 개발 시 인센티브 등을 통해 건물 내에 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고 기부채납을 통해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진행 중인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건립지원 등의 공의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3)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자체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자체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2004년 「주간보육확충 법」을 제정하고, 15억 유로를 투입하여 자체가 3세 이하 아동에게 충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2007년 5월에는 2013년까지 어린이집 수를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하여 3배인 75만 개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⁷⁾

특별법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심의위원회의 설치, 용지 확보, 디자인 기준 설정, 공공건축물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유휴부지 및 유휴시설의 활용, 설치비용의 보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7) 미야모토 타로, 복지정치 : 일본의 생활보장과 민주주의, 논형, p.8

3.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 향상 방안

1)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의 환경개선

기존 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가장 대표적이고 관련 예산규모는 2013년 236.1억 원으로 전체 보육예산(4조 1,778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6%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신축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은 증·개축에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가 최대 9천9백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평균 비용인 약 4억 5천만 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⁸⁾

따라서 해당 사업은 본래의 사업취지에 맞게 리모델링 수요에 집중하고 그 예산도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도로, 철도 등 국가 인프라 구축에 드는 건설투자액이 국내총생산의 15.5%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여 보육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인 어린이집 기능개선 예산을 전체 보육예산의 1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기준의 현실화

현행 어린이집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인당 시설면적은 놀이터를 제외하고 영유아 1명당 $4.29m^2$ 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1991년의 기준인 $4.29m^2$ 가 어린이집에 대한 양적 확산 정책이 추진되었던 1994년에 $3.63m^2$ 로 축소되었다가 2005년 다시 $4.29m^2$ 로 환원된 수치이다. 이러한 영유아 1인당 보육실 최소면적 기준은 교정시설의 1인당 기준면적 $2.58m^2$ 와 유사한 규모이다.⁹⁾ 실제로 최근 2년간 건설된 신축 어린이집의 정원 1인당 면적은 최소 $5.6m^2$ ~최대 $10.56m^2$, 평균 $8.10m^2$ 로 나타나 법정 시설면적 기준과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¹⁰⁾

어린이집에 대한 1인당 시설면적 기준을 법으로 정한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외

8) 김상호, 전계서, p.51

9)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수용구분에 관한 지침(08.6)의 혼거실 1인당 기준면적은 $2.58m^2$

10) 김상호, 전계서, p.47

국의 경우 보육실 등에 관한 최소 면적 기준은 제시하고 있으나 1인당 시설면적은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서 제정한 디자인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적정 또는 권장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의 어린이집 디자인가이드에서 1인당 적정 시설면적을 8.4m^2 로 제시하고 있으며 영국은 교육부의 유아 학교 디자인기준에서 급식시설을 제외하고 싱글유니트(정원 26명) 6.3m^2 , 더블유니트(정원 52명) 5.3m^2 를 적정 소요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보육소 정비안내(요코하마시 사례)를 통해 어린이집의 적정 시설면적을 정원 기준으로 60명일 때 9.2m^2 , 90명일 때 8.3m^2 , 120명일 때 7.5m^2 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표3> 어린이집 시설기준의 국제비교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1인당 시설면적	4.29m^2 (법정)	8.4m^2 (권장)	$5.3\sim6.3\text{m}^2$ (권장)	$7.5\sim9.2\text{m}^2$ (권장)		
1인당 보육실면적	2.64m^2	3.15m^2	2.5m^2	2세 미만	$유아실 1.6\text{m}^2$, $포복실 3.3\text{m}^2$	
				2세 이상	보육실 또는 놀이실 1.9m^2	
1인당 실외놀이터 면적	3.5m^2	6.96m^2	9.6m^2	2세 이상	3.3m^2	

따라서 1991년에 도입된 4.29m^2 라는 어린이집 최소 1인당 시설면적 기준을 소득수준 향상(약 3배), 주거면적 확대(약 2배), 인구정책 변화(산아제한에서 출산장려) 등 지난 20년간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준의 법체계 내에서 현행 시설기준을 개선할 경우 지난 2년간 신축 어린이집의 1인당 총면적 평균인 8.1m^2 를 기준으로 예산규모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pm 20\%$ 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6.5\sim9.7\text{m}^2$ 를 적정 소요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3) 적정 건설단가 정보의 제공

보건복지부의 보육예산 중 어린이집의 설치 및 개·보수와 관련된 지원은 장애아 보육 지원과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이 대표적이다. 장애아 보육지원의 경우 지원단가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m^2 당 1,201,300원, 최대 지원규모는 4.76억 원(개소당 396m^2 까지)이다.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은 신축의 경우 개소당 330m^2 (시·도별 예산범위에서 396m^2 까지 탄력적 지원 가능)까지 지원단가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m^2 당 1,201,300원,

최대 국비지원 한도는 237,857,000원이다.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는 전문가의 공사견적가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1개소당 5천만 원이다. 이들 지원예산에는 설계용역비를 반드시 제외토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예산과 실제 공사비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 최근에 건축된 어린이집은 신축의 경우 $1m^2$ 당 최소 1,851천 원~최대 3,264천 원, 평균 2,112천 원으로 지원예산과 평균 1.76배의 차이를 보인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1m^2$ 당 최소 1,113천 원~최대 2,017천 원, 평균 1,502천 원, 총공사비 규모는 최소 2.94억 원~최대 5.65억 원, 평균 4.50억 원으로 지원예산한도액과 매우 큰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어린이집의 $1m^2$ 당 신축 공사비 지원금액은 경찰서 1,610천 원, 일반청사 1,670천 원, 병원 1,940천 원, 전시시설 2,550천 원 등 다른 공공건축물의 2012년 기준 표준 건축비 지원금액과 비교하더라도 1.34배~2.12배의 차이를 보여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3~5세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의 2013년 건축비 교부단가는 $1m^2$ 당 1,822천 원으로 어린이집 신축 지원비보다 1.52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린이집은 표준적인 건축비뿐만 아니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별도의 인테리어비용과 교육, 놀이 등을 위한 어린이집설비 비품 등을 구비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반영한 적정 건설단가는 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어린이집 신축 공사비에 대한 분석결과¹¹⁾ 건축비 69.1%, 어린이집설비 비품 외 14.2%, 인테리어공사비 11.1%, 설계비 4.6%, 전기 및 건축주 부담금 1.0%의 비율을 보여 일반적인 공공건축물에 비해 약 30%의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적정 건설단가는 일반 공공청사의 표준건축비 단가인 $1m^2$ 당 1,670천 원에 인테리어와 설비 비품 등 30%의 비용 상승분을 반영한 2,170천 원이 적정 수준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어린이집의 품질문제는 대개 설계의 충실도에 의해 결정되므로 현행 보육 관련 사업예산에서 설계비를 반드시 반영토록 할 필요가 있다.

11) 김상호, 전계서, p.53

4)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가이드라인 제시

어린이집에 대한 선진국의 디자인관리는 별도의 법정 면적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대신에 설계자나 관리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상세한 수준의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미국은 정부 소유의 토지와 부동산관리를 전담하는 GSA 산하 PBS(Public Building Service)에서 유치원, 학교, 공공청사 등의 건축 및 유지관리서비스를 담당하며 여기서 연방정부의 어린이집 디자인가이드(Child Care Center Design Guide)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다. 영국도 교육부에서 작성한 유아 학교 디자인 기준(Building Handbook : nursery schools)이 제공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교육적 고려사항에서부터 전본설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세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신축 어린이집에 대한 초기 인테리어 변경 등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절한 설계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과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설계 및 유지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별도의 디자인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정책적 시사점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현황과 제도적 문제점을 바탕으로 양적인 확충과 질적인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서울시는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 이상 공급하여 그 비율을 현재의 13.7%에서 28%로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전무한 15개 동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확충, 가정·민간 어린이집 매입 전환, 공공기관 내 설치 등 다양한 유형의 국공립어린이집 개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국가의 정책에 앞서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이 밀거름되어 앞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공급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상호, 2013,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
소
- 양미선 외, 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경숙 외, 2006, 「보육시설 설치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 최경숙 외, 2006, 「보육시설 설치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 푸르니보육지원재단, 2012,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 LH 주택사업본부, 2012,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대한토지주택공사

생
생
리
포
트

SEOUL ECONOMIC BULLETIN

생생리포트

■ ‘아이조아～서울’ 아버지 교육

조경진(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선임보육전문요원)

‘아이조아~서울’ 아버지 교육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선임보육전문요원

조경진

seoul-center@daum.net

I. 2014년 ‘아이조아~서울’ 아버지 교육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2. 추진개요

II. 2014년 ‘아이조아~서울’ 아버지 교육 사업 추진내용

1. 프로그램 세부 운영 현황

III. 2014년 ‘아이조아~서울’ 아버지 교육 사업 평가

1. 만족도 조사 결과

2. 사업 전체평가

IV. 2015년 ‘아이조아~서울’ 아버지 교육 사업 추진계획

1. 주요 추진방향

2. 추진체계

3. 사업별 주요계획

I. 2014년 ‘아이조아~ 서울’ 아버지 교육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1)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아버지 역할에 대한 요구

- 여성 취업률(‘14년 전체의 50.2%, 영유아 자녀 맞벌이 가정은 ‘13년 전체의 41.1%)의 지속적인 증가로 맞벌이 부부 수가 확대됨에 따라 가정 내 평등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됨
- 여성 취업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여성의 가사노동과 양육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따른 부담감으로 취업여성이 일과 가정생활 균형의 어려움에 봉착함(정문숙, 2001)
-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른 가정환경의 변화 때문에 가사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능동적 참여가 요구되면서 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전문적 정보제공이 필요함

2) 일·가정 양립 인식개선을 통한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가사·양육분담을 하는 아버지일수록 아버지 역할에 대한 민족감이 향상되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족관계가 향상됨
- 아버지 교육 참여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게 하므로(권혜진, 2013)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음(아버지 교육 참여자 경험을 통해 살펴본 아버지 교육의 의미, 한국보육지원학회)
- 아버지 교육을 통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직장 내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가 확산됨으로써 향후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의 기반이 될 수 있음

2. 추진개요

1) 사업방향



[그림 1] 아버지 교육의 방향

2) 사업내용

<표 1> '아이좋아~서울' 사업의 개요 및 일정

사업명	개요	일정
'아이조아~서울' 아빠 교실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 및 자녀양육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시 정례화하여 교육함	2014년 4월~12월 매월 격주 목요일 12시~13시 (총16회)
'아빠랑 놀자~' 놀이 교실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와 자녀가 놀이 위크숍에 참여하여 자녀와 즐겁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배우며 돈독한 관계를 맺음	2015년 4월~11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9시, 둘째 주 토요일 11시 (총12회)

II. 2014년 ‘아이조아~ 서울’ 아버지 교육 사업 추진내용

1. 프로그램 세부 운영 현황

1) ‘아이조아~ 서울’ 아빠교실

〈표 2〉 ‘아이조아~ 서울’ 아빠교실 일정 및 인원

회	주제	교육일자	참여인원
1	‘나는 나’ , 아빠! 나를 알아주세요.	4.10	70명
2	육아와 함께 자라는 아빠	4.24	59명
3	왜? 아이와 눈을 맞춰야 할까요?	5.15	38명
4	각박한 세상에서 도덕적인 아이는 손해일까?	5.29	40명
5	우리들의 행복 선언	6.12	36명
6	땅 밟고 자연에서 놀며 성장하기	6.26	51명
7	우리 아이의 예술적 감수성을 찾아서	7.10	38명
8	화목한 가족으로 살기	7.24	47명
9	자녀의 감정을 읽어주는 감정코치	9.4	66명
10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9.18	39명
11	복잡한 사회일수록 여성성과 남성성, 모두 발휘하기	10.2	53명
12	왜 아이들은 아빠에게 매달릴까요?	10.16	47명
13	우리 뇌의 놀라운 능력과 잠재력의 비밀	10.30	69명
14	세 살 버릇 어듣까지	11.13	56명
15	어떻게 놀아줄까요?	11.27	77명
16	우리 아이의 첫 학교, 어린이집과 유치원	12.11	44명
계			826명



[그림 2] ‘아이조아~ 서울’ 아빠교실 운영 사진

2) ‘아빠랑 놀자~’ 놀이 교실

〈표 3〉 ‘아빠랑 놀자~’ 놀이교실 일정 및 인원

회	주제	세부 내용	참여 인원
1	감각소통	솜공터치, 여러 가지 맛 알아맞히기 등	28명
2	정서소통	아이클레이만들기, 이불그네 등	30명
3	언어소통	손답쌓기, 등글씨 맞추기 등	26명
4	건강한 도전	강건너기, 힘보활동, 엄지씨름 등	30명
5	조절력 향상	깃털패스, 솜공전달, 젓가락 탑쌓기 등	14명
6	친밀감 증진	솜공 숨기고 찾기, 풍선끼우고 걷기 등	30명
7	조절능력	신문지편치, 두팔농구, 자석놀이 등	28명
8	협동능력	사방치기, 풍선배구, 꼬깔콘먹여주기 등	28명
9	혼자놀이	점토활동, 종이접기, 컵쌓기 등	18명
10	형제놀이	씨뱉기, 방석자동차, 방석징검다리 등	26명
11	가족놀이	김밥놀이, 요람 흔들기 등	22명
12	야외놀이	비눗방울활동, 페이스페인팅 등	30명
계			3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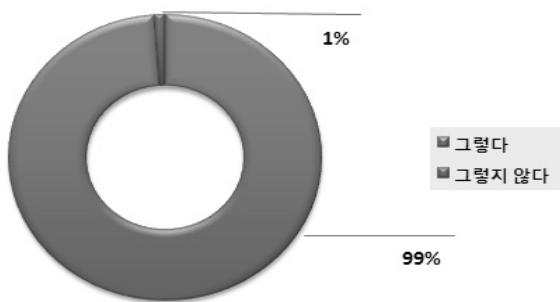
[그림 3] ‘아빠랑 놀자~’ 놀이교실 운영 사진

III. 2014년 ‘아이조아~ 서울’ 아버지 교육 사업 평가

1. 만족도 조사 결과

1) 교육시간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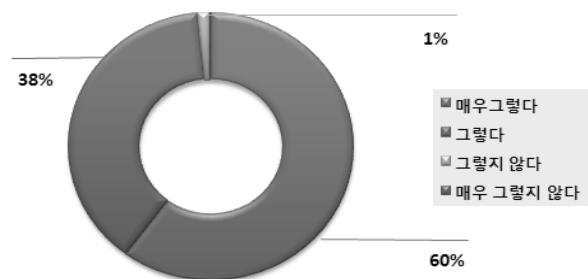
- ‘교육시간이 적절하다’는 99%, ‘교육시간이 적절하지 않다’는 1%로 나타남
- 아버지 정기교육은 평일 오전 혹은 저녁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교육을 들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음
- 놀이 워크숍은 아이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 교육을 편성하여 교육시간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임



[그림 4] ‘아이조아~ 서울’ 교육시간 만족도 결과

2) 교육 주제 및 내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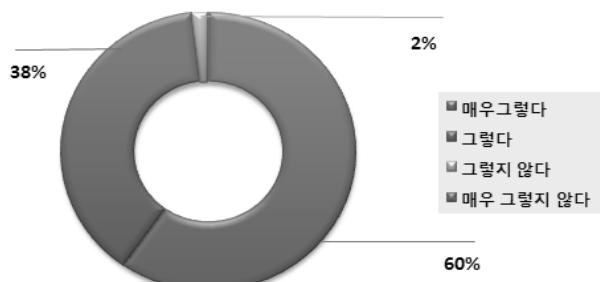
- ‘교육 주제 및 내용이 적절하다’ 는 98%, ‘교육 주제 및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1%로 분석됨
- 시기별 및 월별로 적정한 주제가 선정되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 놀이 워크숍은 나들이가 가기 좋은 봄, 가을에는 야외놀이와 관련된 놀이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고, 아버지 교육은 12월에 어린이집의 일상에 대한 주제 등으로 진행했던 것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그림 5] ‘아이조아~ 서울’ 교육 주제 및 내용 만족도 결과

3) 교육내용 도움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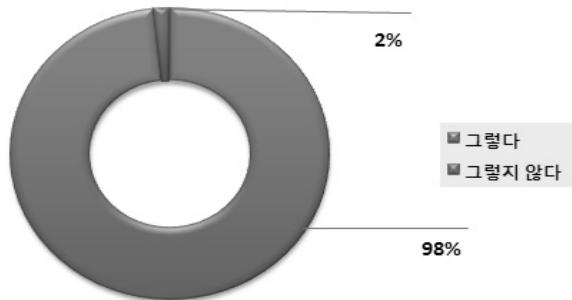
- ‘교육내용이 도움이 되었다’ 는 98%, ‘교육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2%로 파악됨
- 우수한 전문 강사진으로 편성된 교육을 진행하고, 나아가 실제 육아를 하고 있는 육아 전문가들을 초빙한 것이 아버지들의 공감을 이끌고 높은 만족도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그림 6] ‘아이조아~ 서울’ 교육의 도움정도 만족도 결과

4) 차기교육 참여의사

- ‘차기 교육에 참여할 것이다’ 는 98%,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는 2%로 나타남
- 교육 내용이 실제 육아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매번 주제가 다양하고 참신하여 다음 교육도 기대감을 갖고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그림 7] ‘아이조아~ 서울’ 교육의 차기교육 참여의사 결과

2. 사업 전체평가

- 아버지 정기교육은 1회당 평균 52명이 참석하는 결과를 보이면서 당초 예상하였던 ‘회당 참석인원 20명 내외’ 보다 약 2배 높은 성과를 나타내었음
- ‘아빠랑 놀자~’ 놀이워크숍은, 1회당 평균 13쌍이 참석하는 결과를 보이면서 당초 예상하였던 ‘회당 참석인원 12쌍 내외’ 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음
- 사업홍보는 인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마케팅을 실시한 결과 웬텍 C&I와 후지제록스 기업에서 단체로 교육을 참여하였으며 개인으로 신청한 아버지들도 많았음
- 올해 ‘아이조아~ 서울’ 아버지 교육은 우수한 강사진 선정 및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인근 직장인 아버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또한 높은 교육 만족도를 보여주었음

IV. 2015년 ‘아이조아~ 서울’ 아버지 교육 사업 추진계획

1. 주요 추진방향

1) ’14년 시범 사례모형을 바탕으로 서울 10개 지역 확대 실시

- ’14년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아이조아~ 서울’ 아버지 교육을 통해 많은 아버지가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아버지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이에 따라 서울 10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더 많은 아버지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시 전반에 걸쳐 아버지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추진체계

〈표 4〉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체계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수립, 사업총괄 관리 및 지원 ■ 사업관련 홍보 추진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운영 및 관리 ■ 교육운영매뉴얼 개발 및 제작 (주제 및 강사풀 등) ■ 만족도 조사 및 사업결과보고서 배부 ■ 자치구센터 실적 취합 ■ 교육 시행 (아빠교실 18회, 놀이교실 12회)
서울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0개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시행 (센터별 아빠교실 3회, 놀이교실 3회) ■ 만족도 조사 및 사업결과보고서 작성

3. 사업별 주요계획

1) ‘아이조아~ 서울’ 아빠교실

- 목적 :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을 정립하고 양육과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정례화하여 제공하고자 함
- 대상 :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

<표 5> ‘아이조아~ 서울’ 아빠교실 운영 방법

구분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10곳)
기간	2015년 3월 ~ 12월	2015년 3월 ~ 12월
횟수	연 18회 (정기교육 16회 + 특강 2회)	연 30회 (센터별 연 3회 실시)
인원	1회당 50명 내외	1회당 30~50명 내외
일정	매월 격주 목요일 12시~13시(60분)	센터 내부적으로 결정(60분)
장소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청 등	서울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내용(안) : 아빠로서 나 돌아보기, 긍정적 훈육방법, 영유아발달 등
- 기대효과 :
 - 기본적인 영유아 발달부터 문제해결 지도방법까지 양육에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시작해서 주제별 심화내용으로 전개되는 연간 교육을 통해 아버지 양육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 아버지 정기교육 참여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개인적 성장의 기회 확보
 - 서울지역 곳곳에서 아버지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2) ‘아빠랑 놀자’ 놀이교실

- 목적 :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하는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실천적인 양육방법을 배우고 자녀와 친밀하고 돈독한 관계를 맺고자 함
- 대상 :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와 자녀

<표 6> ‘아빠랑 놀자~’ 놀이교실 운영 방법

구분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10곳)
기간	2015년 4월 ~ 11월	2015년 4월 ~ 11월
횟수	연 12회	연 30회 (센터별 연 3회 실시)
인원	1회당 15가정 내외	1회당 12~15가정 내외
일정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90분)	센터 내부적으로 결정(90분)
장소	서울시청, 서울시민청 등	자치구 영유아플라자 등

- 내용(안) : [영아] 촉감을 이용한 애착놀이, [유아] 신체를 이용한 관계놀이
- 기대효과 :
 - 실제로 자녀와 함께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놀이학교 참여를 통해 실천적인 양육 방법을 배우고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 도모
 - 영아와 유아의 반에서 별도로 구성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연령별 발달 맞춤 놀 이를 제공하여 참여가정의 민족도 증가
 - 서울지역 곳곳에서 실천적인 아버지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인
포
그
래
픽
스

SEOUL ECONOMIC BULLET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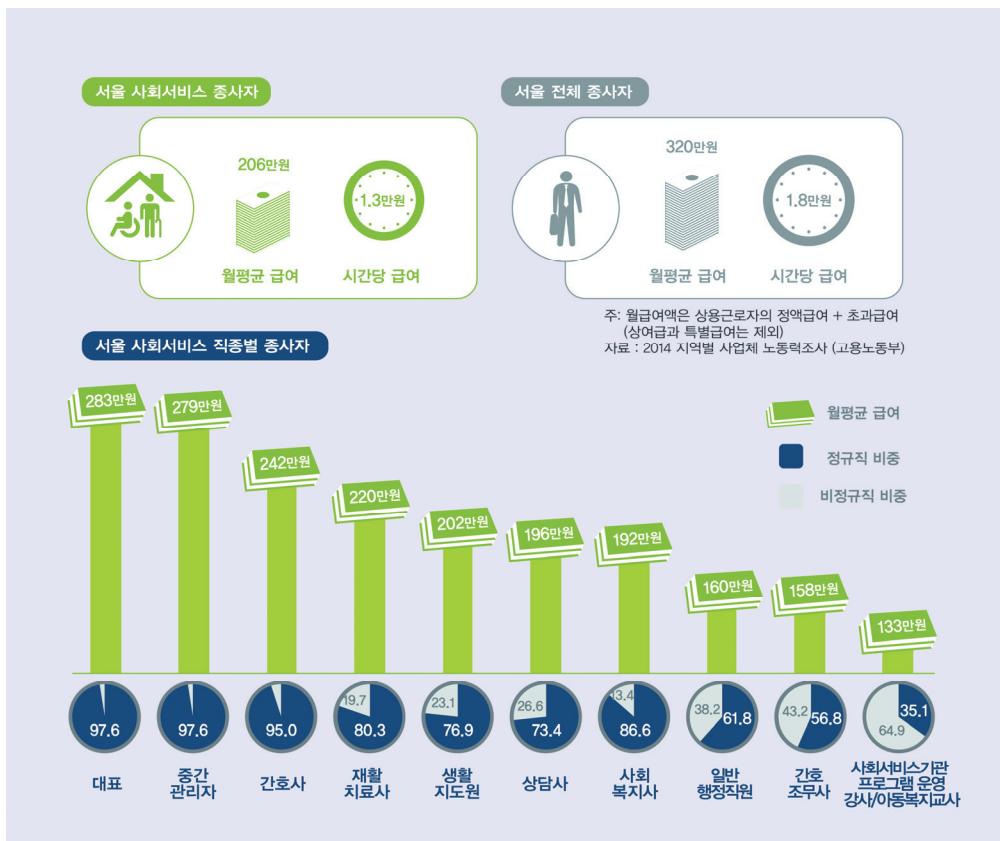
인포그래픽스

■ 서울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월 평균 급여는?

박희석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장윤선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서울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는?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박희석 연구위원 hspark@si.re.kr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서울 사회서비스 종사자 월평균 급여는 206만 원으로 서울 전체 월평균 급여 320만 원 보다 114만 원 적은 것으로 조사됨

사회서비스 직종의 급여는 대체로 정규직 비중이 클수록 많고, 비정규직 비중이 클수록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서울 사회서비스 종사자 월평균 급여는 206만 원, 시간당 급여는 1만3천 원

- 사회서비스 종사자 월평균 급여액은 2014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서울시 월평균 급여 320만 원보다 114만 원 적음
- 서울의 사회서비스 종사자 시간당 급여액은 1만3천 원으로 서울 평균 시간당 급여액 1만8천 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 사회서비스 직종별 월평균 급여액은 모두 서울 월평균 급여 320만 원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됨

■ 사회서비스 직종의 급여는 대체로 정규직 비중이 클수록 많고 비정규직 비중이 클수록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급여가 가장 적게 나타난 직종은 ‘사회서비스기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아동복지교사’ 133만 원, ‘간호조무사’ 158만 원, ‘일반 행정직원’ 160만 원 순
- ‘사회서비스기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아동복지교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무자의 특성상 계약직과 시간당 근로자의 비중이 높음

<표 1> 서울 전체 종사자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 및 근로시간

(단위: 시간, 만원)

	주 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급여액	1시간당 급여액
서울 전체 종사자	44.7	320.0	1.8
서울 사회서비스 종사자	40.4	206.4	1.3

주: 서울 전체 종사자 월급여액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 + 초과급여 (상여급과 특별급여는 제외)

자료 : 2014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2014 서울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고용실태조사 (윤민석 부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서울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는?

<표 2> 서울 사회서비스 직종별 현황

(단위: 만원, %)

	월평균 급여액	1시간당 급여액	정규직 비중	계약직 비중
대 표	283.3	1.6	97.6	2.4
중간관리자	279.0	1.7	97.6	2.4
간호사	242.0	1.4	95	5
재활치료사	220.1	1.4	86.6	13.4
생활지도원	202.3	1.1	80.3	19.7
상담사	195.5	1.2	76.9	23.1
사회복지사	191.8	1.1	73.4	26.6
일반행정직원	159.6	1.1	61.8	38.2
간호조무사	157.6	1.0	56.8	43.2
사회서비스기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 아동복지교사	132.5	1.0	35.1	64.9

주: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사회보장기본법)

자료: 2014 서울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고용실태조사 (윤민석 부연구위원, 서울연구원)

SEOUL ECONOMIC BULLETIN

경제동향

■ 요 약

■ 생 산 제조업지수/재고지수

■ 소 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 고 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 물 가 소비자물가/ 신선식품

곽지원 연구원(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 응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재단

■ 수출입 수출입액/수출입 품목/국가별 품목

정의영 연구원(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 요 · 약 | 12월 서울의 경제동향

생 산

- 서울의 12월 제조업생산지수는 109.8로 전년 동월 대비 6.1% 증가
- 12월 제조업 출하·재고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0%, 3.5% 증가 하여 경기확장기

소 비

- 서울의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3,692억 원으로 전국(6조 9,217억 원)의 34.2%를 차지
- 12월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5.8% 감소,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9.5% 증가

고 용

- 서울의 12월 취업자는 516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천 명(0.1%)이 증가
- 서울의 12월 고용률은 60.5%로 전년 동월 대비 0.2%p 감소, 실업률은 4.1%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

물 가

- 2014년 12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9.7(2010년=100.0)로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

부 동 산

- 서울의 12월 주택매매가격지수 주요 상승지역은 종로구(0.22%), 성동구(0.16%), 주요 하락지역은 강북구(-0.15%), 서초구(-0.12%), 용산구(-0.12%)
- 서울의 12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10.2로 전월대비 상승하고, 전 자치구에서 전월보다 상승한 가운데, 주요 상승지역은 종로구(0.75%), 강북구(0.64%), 서초구(0.75%), 강남구(0.68%)

금 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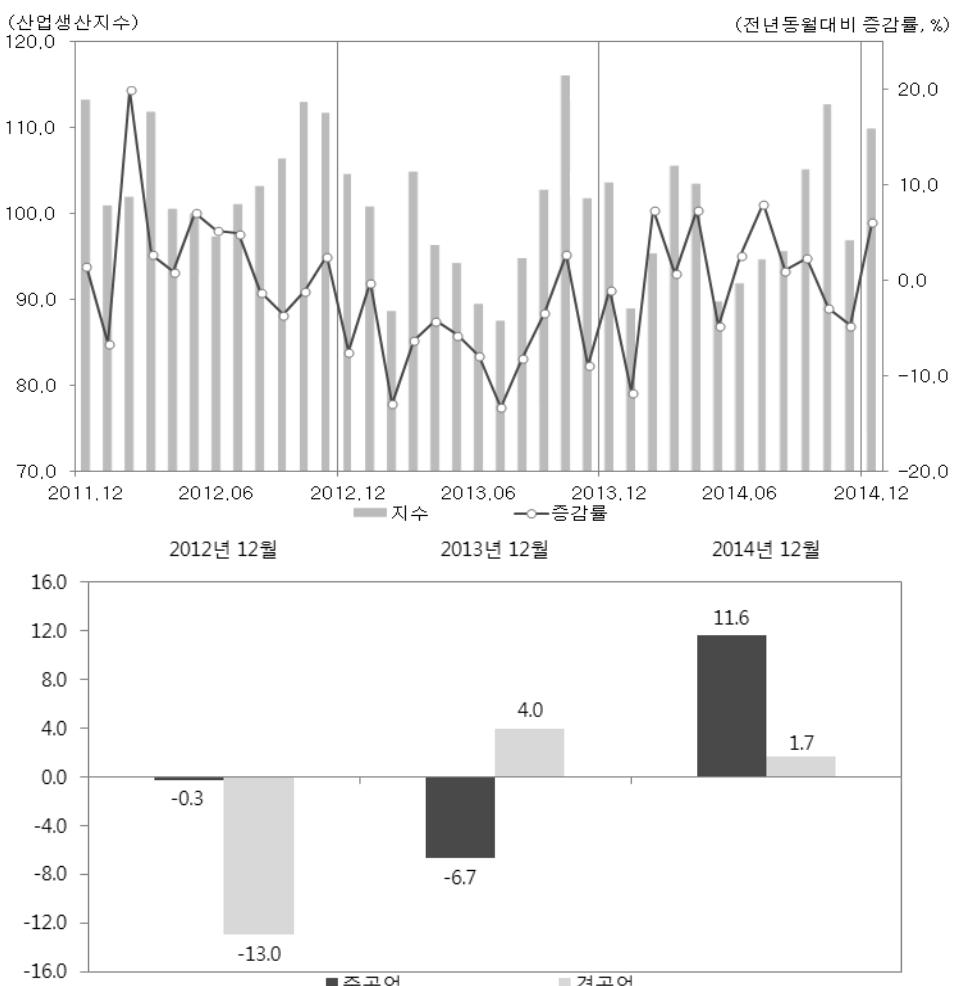
- 서울의 12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591조 8,256억 원으로 전월 대비 0.26% 증가
- 서울의 12월 기계대출은 189조 6,801억 원으로 전월 대비 0.8% 증가
- 서울의 12월 신설법인 수는 2,520개로 전월 대비 16.9% 증가
- 서울의 12월 부도업체 수는 29개로 전월 대비 81.3% 증가
- 서울의 12월 보증금액, 보증지원건수 전월 대비 각각 45.6%, 40.8% 감소

수 출 입

- 서울의 12월 수출은 51.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하고, 품목별로는 자동차 부품,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서울의 12월 수입은 121.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하고, 품목별로는 자동차,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생 · 산 |

- 서울의 2014년 12월 제조업생산지수 109.8(2010=100)로 전년 동월 대비 6.1% 증가
 - 공업구조별로 중공업 부문은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 경공업은 1.7% 증가
 - 제조업 부문별로 전년 동월 대비 의료정밀과학(102.6%), 전기장비(92.5%), 전기·가스·증기업(11.3%) 등은 증가, 기계장비(-42.8%),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23.7%), 기타제품(-18.9%) 등은 감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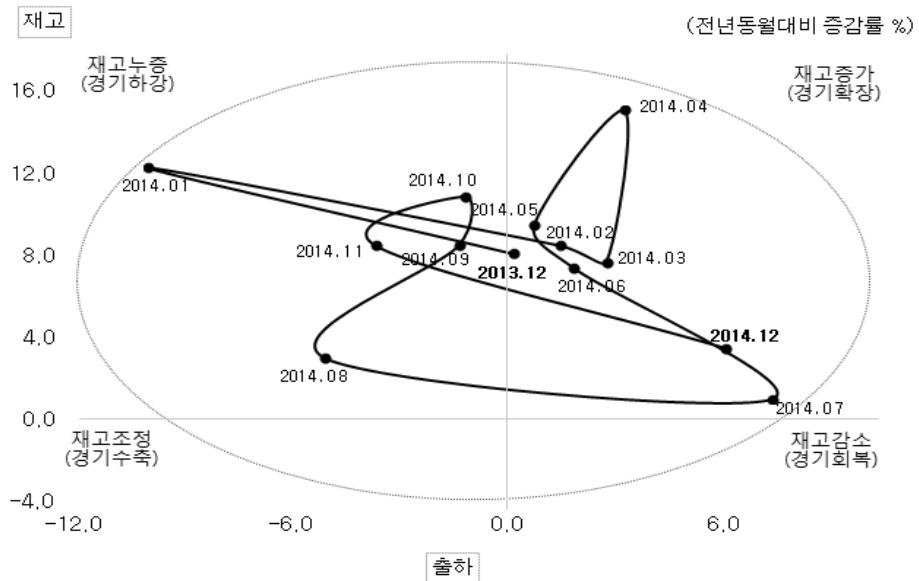
| 출하 · 재고 순환 |

■ 서울의 12월 제조업 출하,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로 경기확장기

- 서울의 12월 출하지수는 112.9(2010=100.0)로 전년 동월 대비 6.0% 증가
- 서울의 12월 재고지수는 120.3(2010=10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
- 출하, 재고가 상승하여 경기확장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 · 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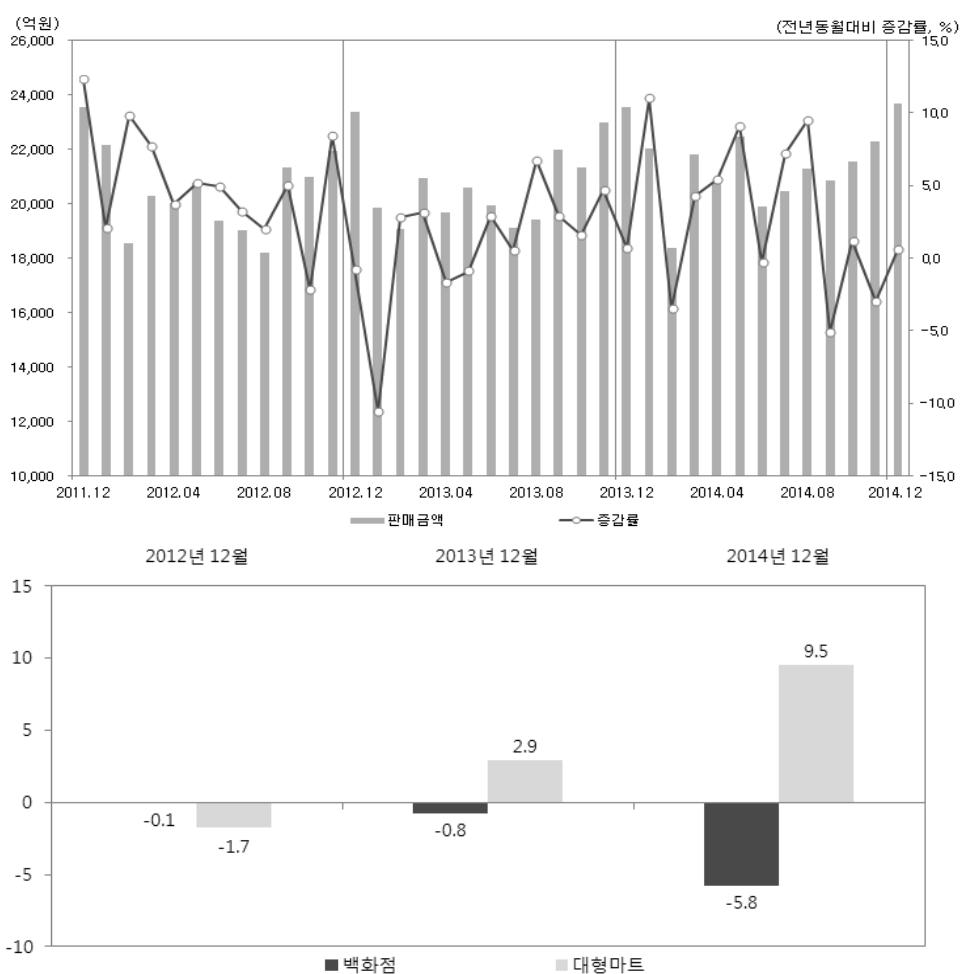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출하 · 재고 증감률 추이

| 소·비 |

■ 서울의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0.6% 증가

- 서울의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3,692억 원으로 전국(6조 9,217억 원)의 34.2%
- 백화점 판매액은 1조 2,845억 원으로 전국(2조 8,888억 원)의 44.5%,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 846억 원으로 전국(4조 329억 원)의 26.9%를 차지
- 서울의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6.6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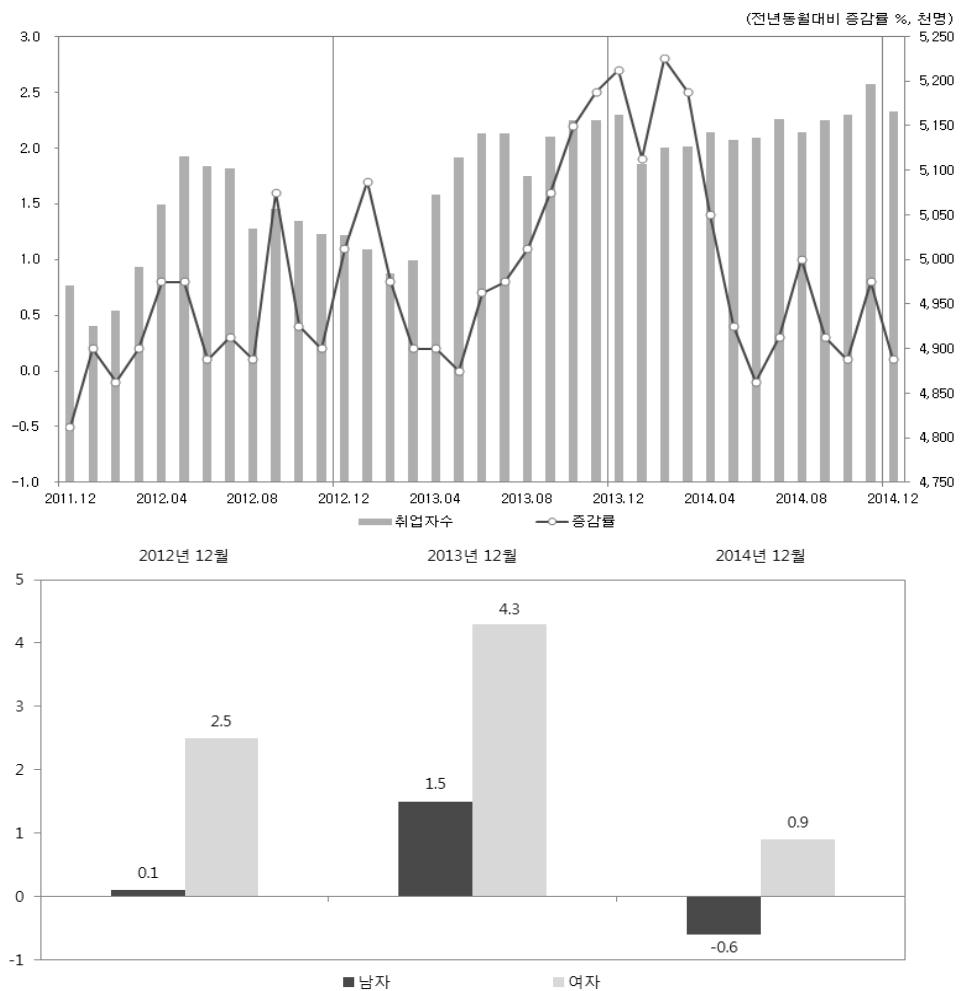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

| 취 · 업 · 자 |

■ 서울의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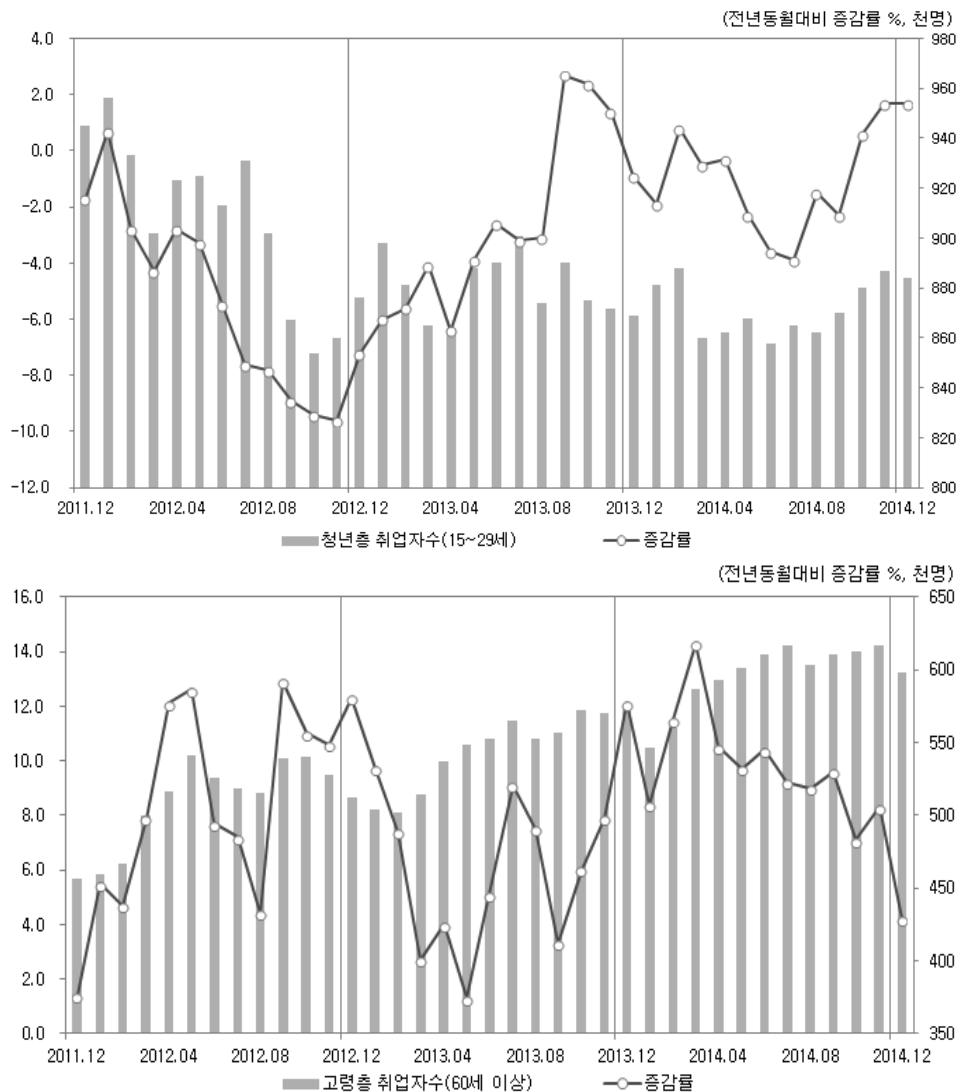
- 서울의 12월 취업자는 516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천 명(0.1%)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5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7천 명(-0.6%p) 감소하고, 여자는 230만 8천 명으로 2만 2천 명(0.9%) 증가
-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숙박음식업이 7만 4천 명(5.3%), 건설업이 2만 6천 명(8.5%)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

- 서울의 12월 청년층(15세~29세)과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은 플러스 증가세
 - 서울의 12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88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
 - 서울의 12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59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 증가해 꾸준한 플러스 성장
 - 고령층의 취업 증감률은 2014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성장 폭이 감소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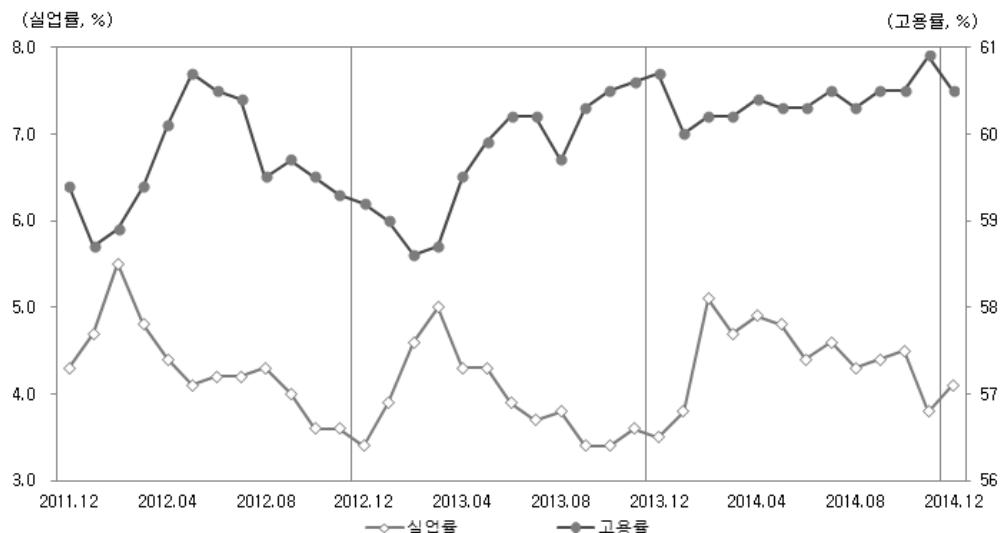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

| 고 · 용 · 률 · 및 · 실 · 업 · 률 |

- 서울의 12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으나, 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 서울의 12월 고용률은 60.5%로 전년 동월 대비 0.2%p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9%로 전년 동월 대비 0.6%p 감소, 여자는 51.9%로 0.2%p 증가
 - 2014년 12월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59.4%)보다 1.1%p 높은 수준

- 서울의 12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으며, 전국 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12월 실업자는 22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5천 명(18.2%)이 증가
 - 실업률은 4.1%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6%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여자는 3.6%로 0.5%p 각각 상승
 - 2014년 12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3.4%)에 비하여 0.7%p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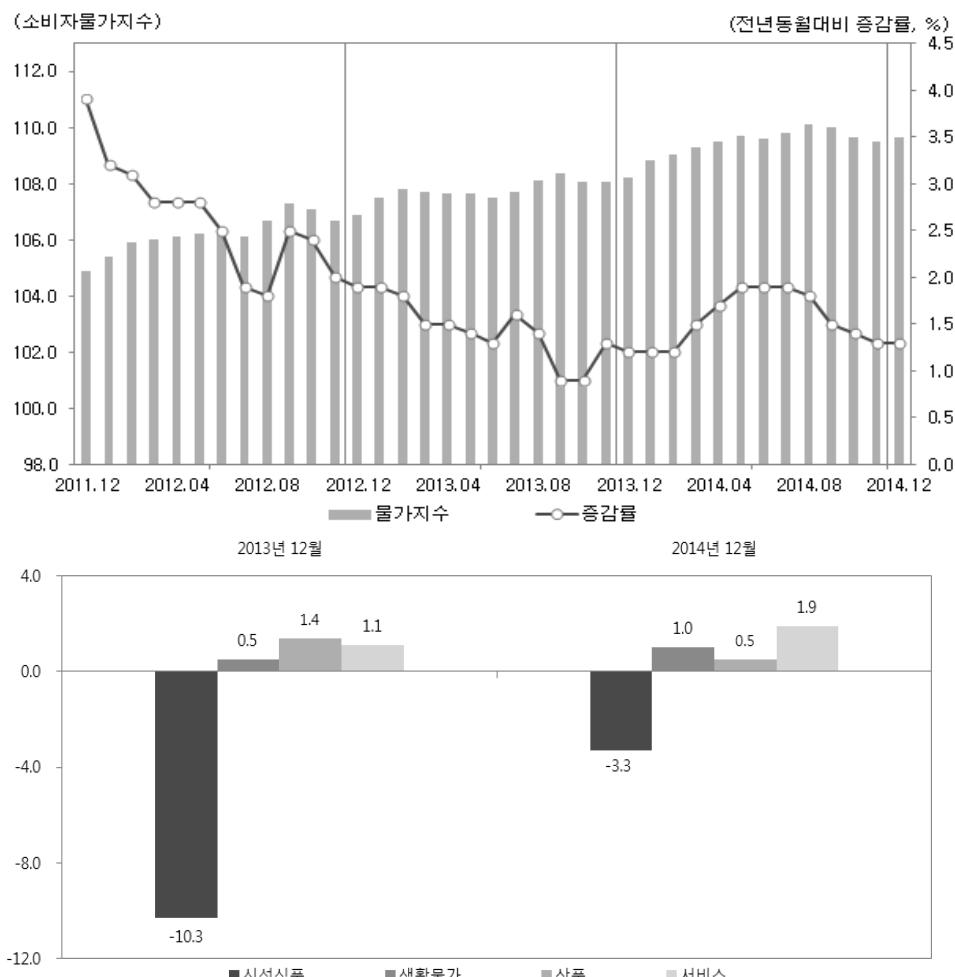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 물 · 가 |

■ 서울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

- 2014년 12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9.7(2010년=100.0)로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
- 전년 동월 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 교통(-4.0%), 오락·문화(-0.4%), 주류 및 담배(-0.4%)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상승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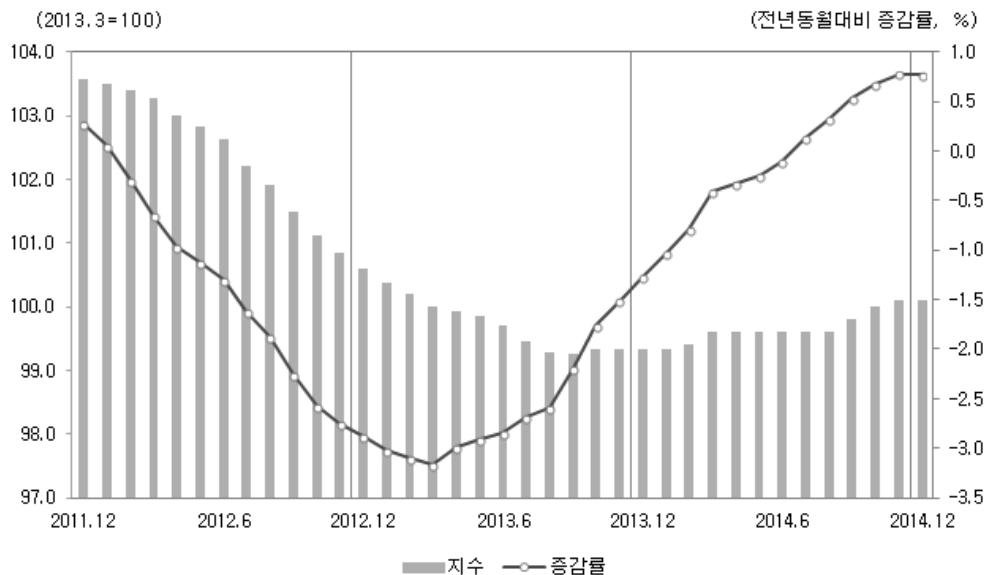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 서울의 12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과 보합

- 서울의 12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0.1로 전월과 보합수준을 유지하며 강남지역(100.5), 강북지역(99.8)이 각각 전월 대비 0.03% 감소, 0.05% 상승
- 주요 상승지역: 종로구 (0.22%), 성동구 (0.16%)
- 주요 하락지역: 강북구 (-0.15%), 서초구 (-0.12%), 용산구 (-0.12%)
- 아파트(0.02%), 연립주택(0.0%)은 상승, 단독주택(-0.02%)은 6개월 만에 하락

■ 전국의 12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

- 전국의 12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2.6으로 전월 대비 0.18% 올랐으며 6개 광역시(104.6), 수도권(100.5), 기타지방(104.3)은 모두 전월 대비 각각 0.32%, 0.09%, 0.17%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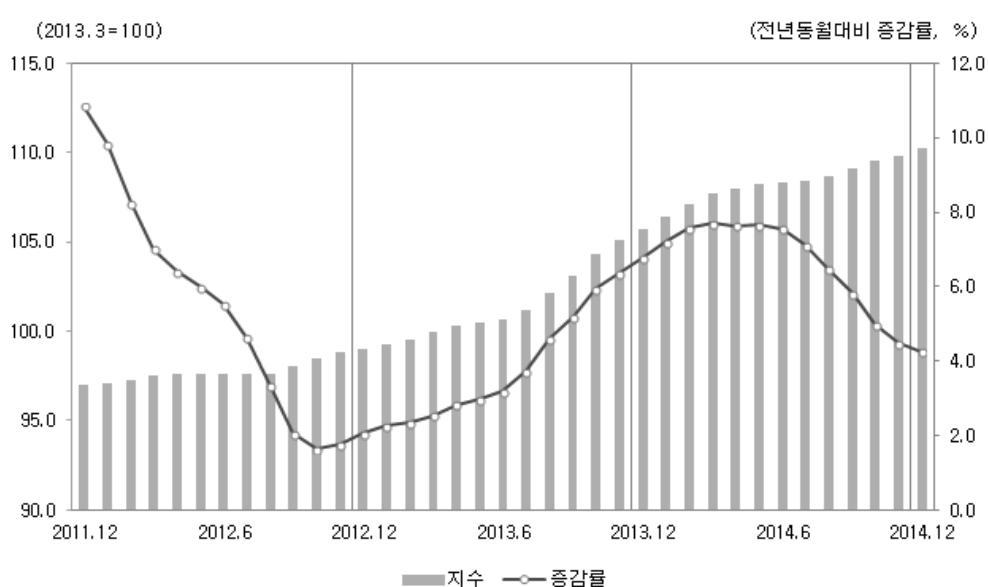
■ 서울의 12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증가, 매매거래건수는 전월 대비 감소

- 평당 평균 매매가격(1,657만 원)은 전월(1,655만 원) 대비 0.13% 증가
- 매매거래건수(6,687건)는 전월(8,469건) 대비 21.0% 감소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 서울의 12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대비 상승, 모든 자치구에서 전월 대비 상승
 - 서울의 12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10.2로 전월 대비 0.40% 올랐으며 강남지역(110.5), 강북지역(109.9) 모두 전월대비 0.37%씩 오르고, 전 자치구에서 전월 대비 상승
 - 주요 상승지역: 종로구 (0.75%), 강북구 (0.64%), 서초구(0.75%), 강남구(0.68%)
 - 아파트(0.42%), 연립주택(0.34%), 단독주택(0.21%) 모두 상승

- 전국의 12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
 - 전국의 12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08.7로 전월 대비 0.32% 상승했으며 6개 광역시 (107.2), 수도권(110.9), 기타지방(105.7) 모두 전월 대비 각각 0.3%, 0.39%, 0.13%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서울의 12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증가, 전세거래건수도 전월 대비 증가
 - 평당 전세가격(1,051만 원)은 전월(1,041만 원) 대비 0.9% 증가
 - 전세거래건수(12,314건)는 전월(11,774건) 대비 4.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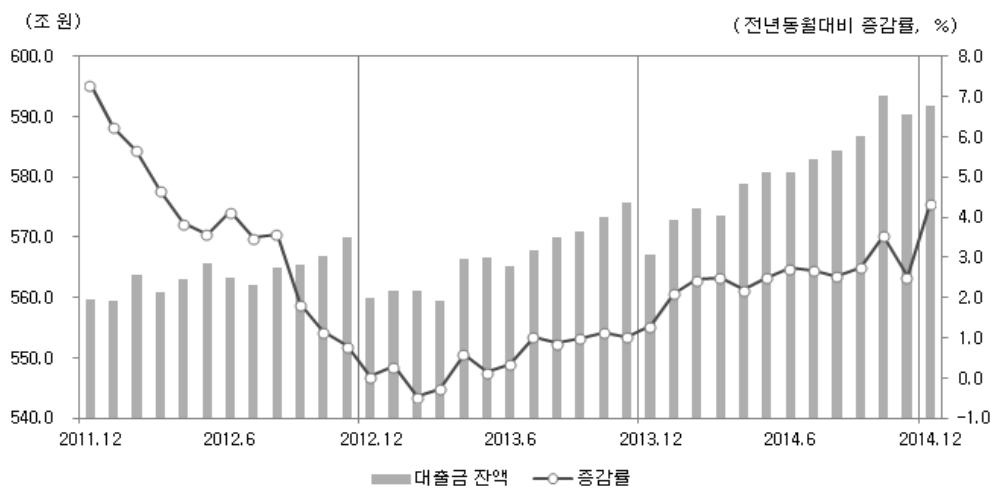
| 가 · 계 · 대 · 출 |

■ 12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591조 8,256억 원)은 전월(590조 2,970억 원) 대비 0.26% 증가
- 그 중 예금은행(494조 4,419억 원)과 비예금은행(97조 3,837억 원)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9% 증가, 7.0% 감소

■ 12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1,628조 6,867억 원)은 전월(1,623조 3,724억 원) 대비 0.33% 증가
- 그 중 예금은행 잔액은 1,250조 1,033억 원이며 비예금은행 잔액은 378조 5,834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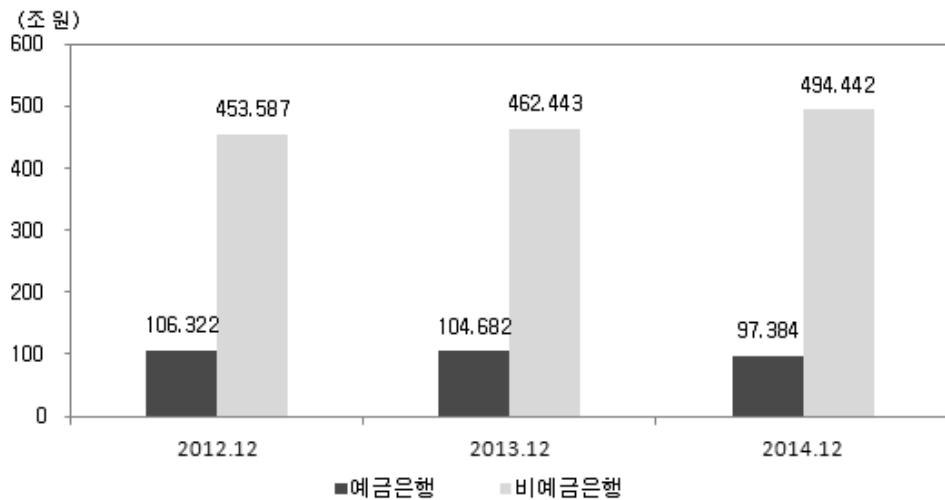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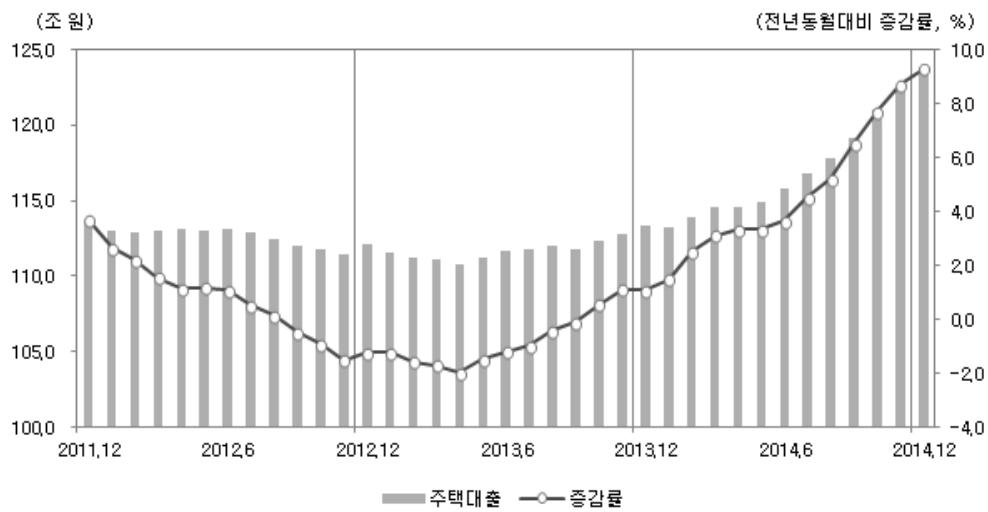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 12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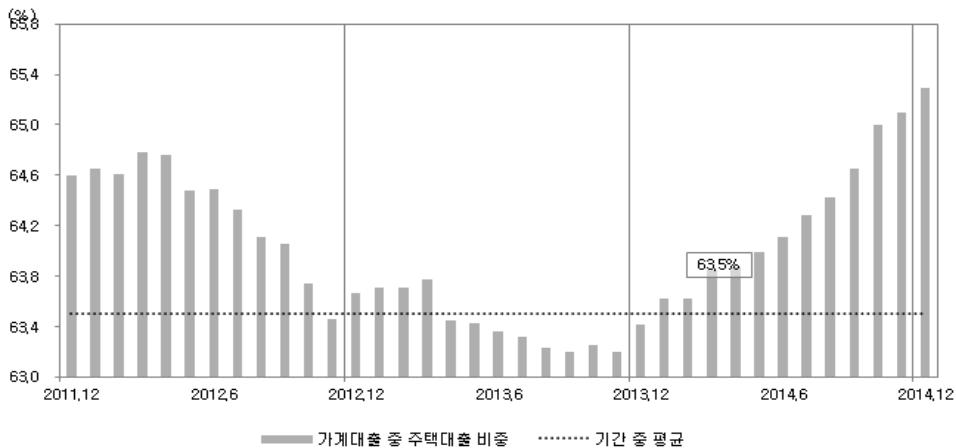
- 은행 가계대출(189조 6,801억 원)은 전월(188조 2,034억 원) 대비 0.8% 증가
- 그 중 주택대출(123조 8395억 원)은 전월 대비 1.1%, 전년 동월 대비 9.3% 증가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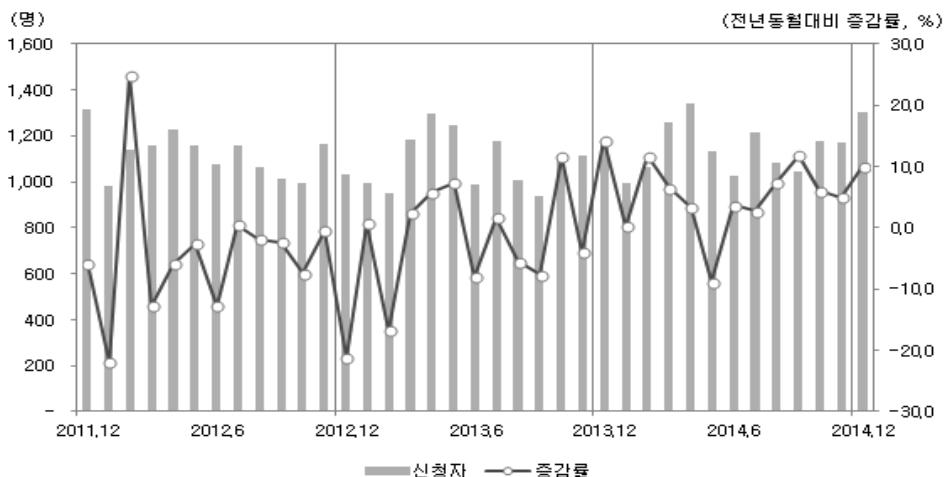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 12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 대비 증가, 면책 신청도 전월 대비 증가

- 개인파산 신청자(1,302명)는 전월 대비 12.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1.2% 증가
- 개인파산 선고 전 기각 처리 건수(21건)는 전년 동월 대비 20건 증가했으며 개인파산 선고 전 기각률은 2.9%로 전년 동월 대비 2.8%p 증가
- 12월의 면책 접수 건수는 1,299건으로, 이 중 면책 기각 처리 건수가 34건이고 면책 기각률(3.0%)은 전년 동월 대비 2.0%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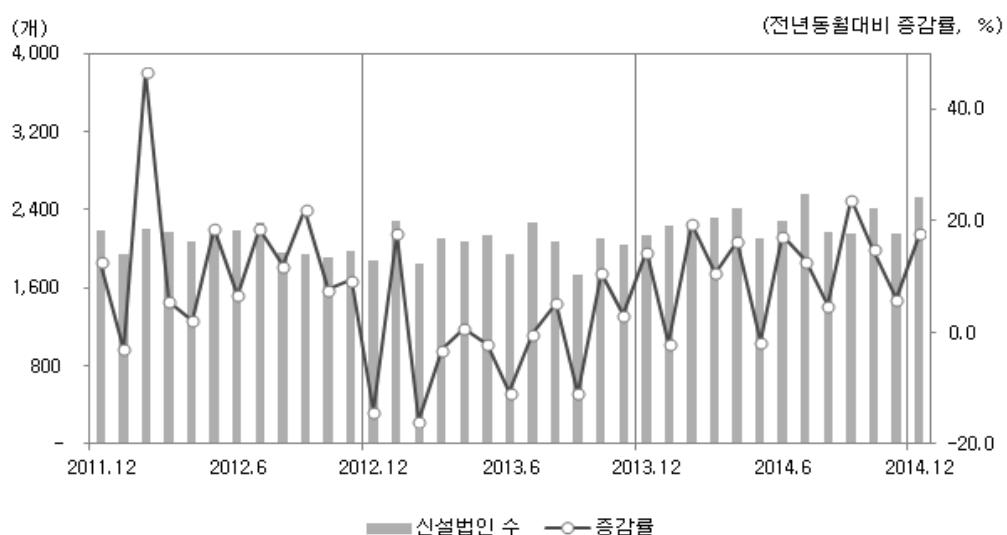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 신·설·및·부·도·법·인 |

■ 서울의 12월 신설법인 수는 전월 대비 증가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520개로 전월 대비 16.9%, 전년 동월 대비 17.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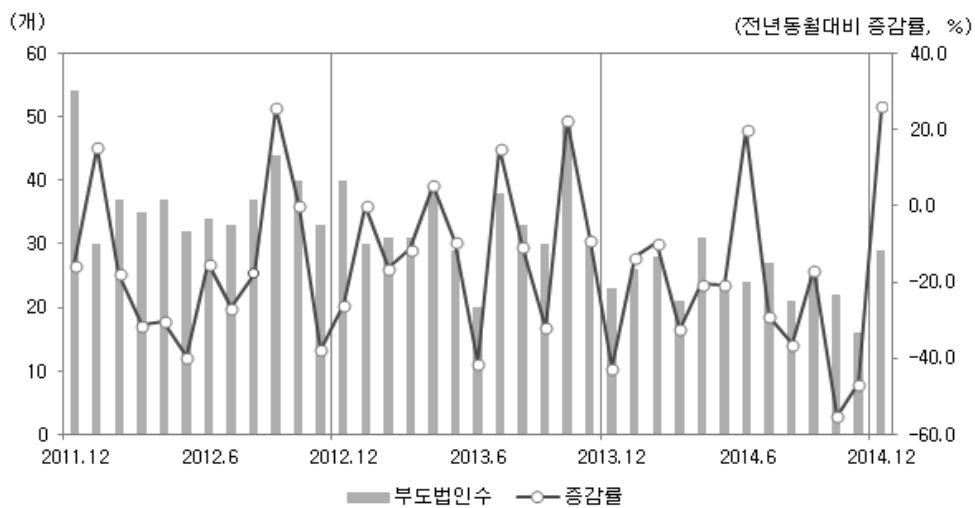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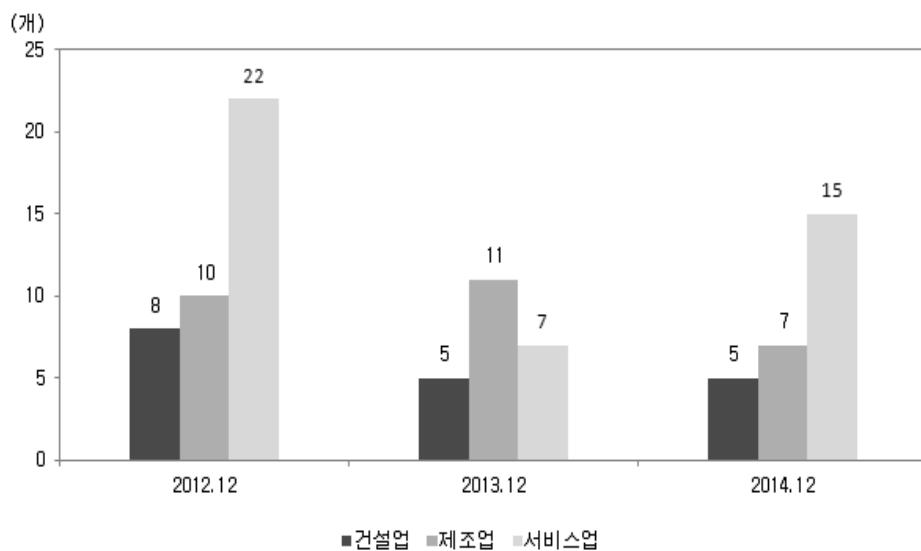
■ 서울의 12월 부도업체 수는 전월 대비 증가

- 서울의 12월 부도업체 수는 29개로 전월 대비 81.3%, 전년 동월 대비 26.1% 증가
- 업종별 부도업체 수는 제조업 7개, 서비스업 15개, 건설업 5개씩이며 전월비 차이는 각각 3개, 6개, 2개와 같고 전월 대비 증감률은 각각 75.0%, 66.7%, 66.7% 기록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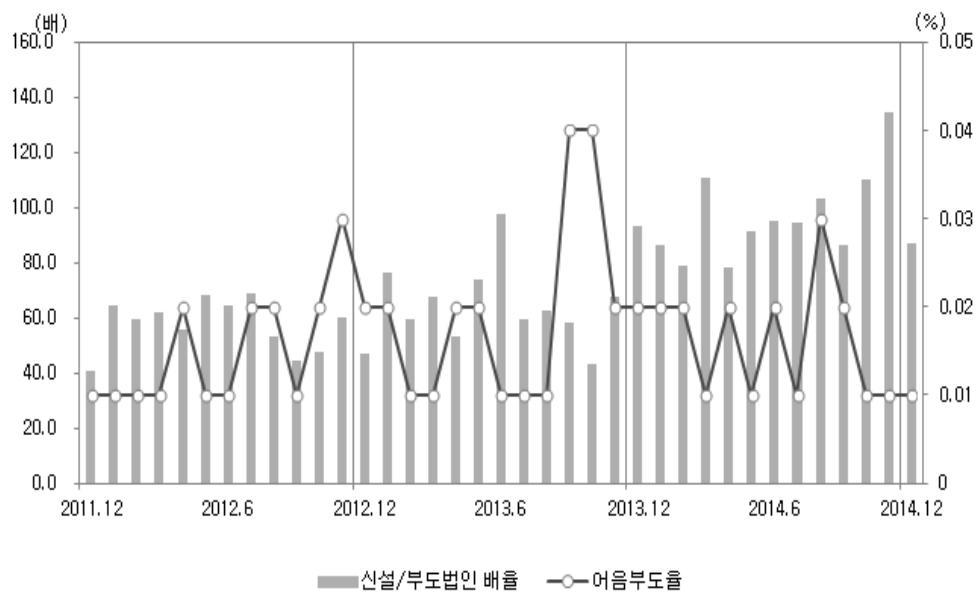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

- 12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전월과 보합, 신설/부도법인 배율은 전월 대비 감소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전월과 동일하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86.9로 전월(134.7) 대비 대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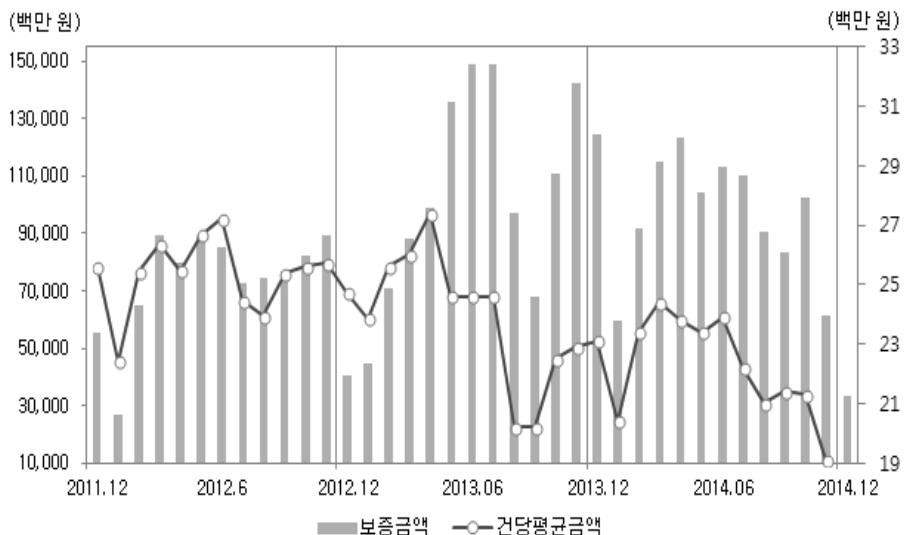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 / 부도법인 배율 동향

| 신·용·보·증 |

■ 서울의 12월 보증금액, 보증지원건수는 전월 대비 대폭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33,472백만 원 / 1,911건
 - 보증금액과 보증건수는 전월 대비 각각 45.6%, 40.8% 감소하고, 건당 평균지원금액 (17.5백만 원)은 전월 대비 8.4% 감소
- 전년 동월 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건수는 각각 73.0%, 64.4% 감소하고,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24.2% 감소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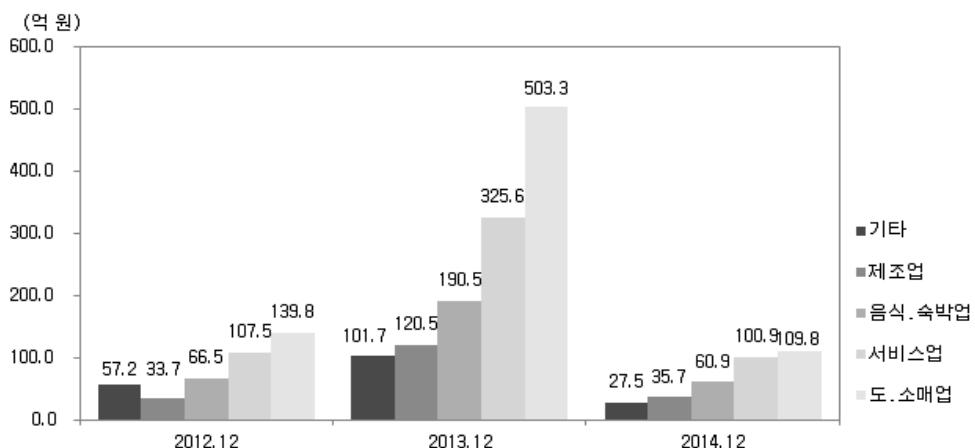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 도소매업 보증지원 비중은 전월 대비 감소, 제조업 보증지원 비중은 전월 대비 증가

- 도소매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109.8백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8.2% 감소하였으며 공급금액 기준 보증지원비중은 32.8%로 전월 대비 2.6%p 감소
- 제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35.7백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4% 감소하였으며 공급금액 기준 보증지원비중은 10.7%로 전월 대비 2.5%p 증가
- 보증건수 기준 시, 589건의 도소매업이 전체의 30.8%로 전월 대비 1.4%p 감소하였으며, 113건의 제조업이 전체의 5.9%로 전월 대비 0.9%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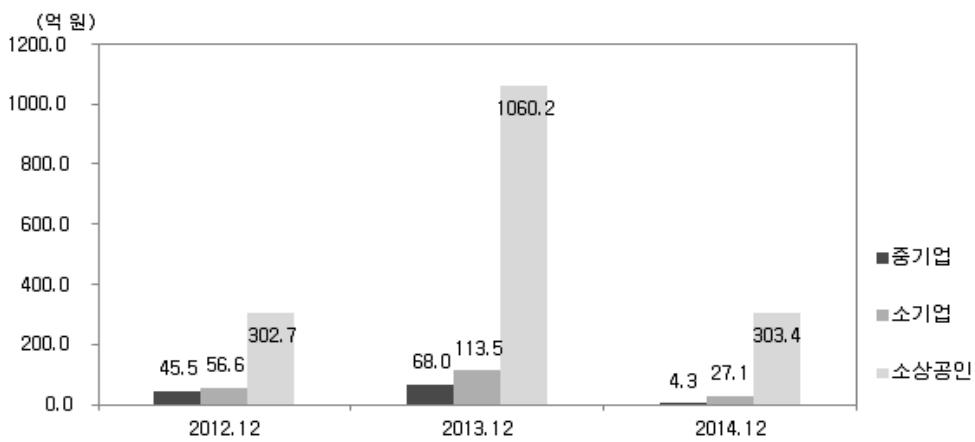
■ 서울의 12월 소상공인 지원 금액 비중은 전월 대비 감소

-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금액은 303.4백만 원으로 공급금액 기준 전월 대비 2.5%p 감소한 전체의 90.6%를 차지하고, 건수 기준은 97.6%(1,865건)로 전월 대비 0.2%p 감소
- 소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27.1백만 원으로 공급금액 기준 전월 대비 2.5%p 증가한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건수기준은 2.1%(41건)로 전월 대비 0.2%p 증가
- 중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4.3백만 원으로 공급금액 기준 전월 대비 0.1%p 감소한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건수기준은 0.3%(5건)로 전월 대비 0.1%p 증가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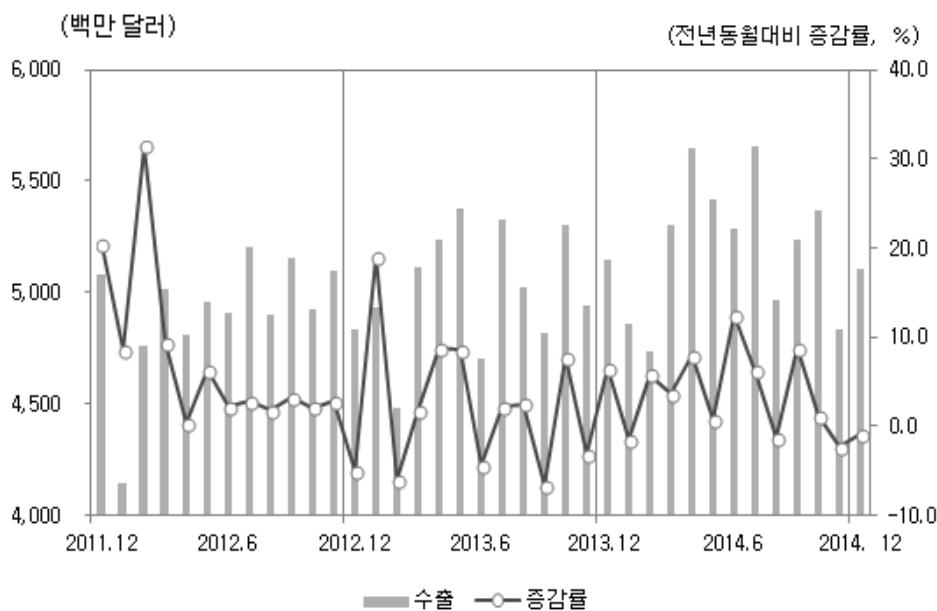
| 수 · 출 · 입 |

■ 서울의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은 51.0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하였고 수입은 121.6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
- 전국의 수출은 494.6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하였고 수입은 439.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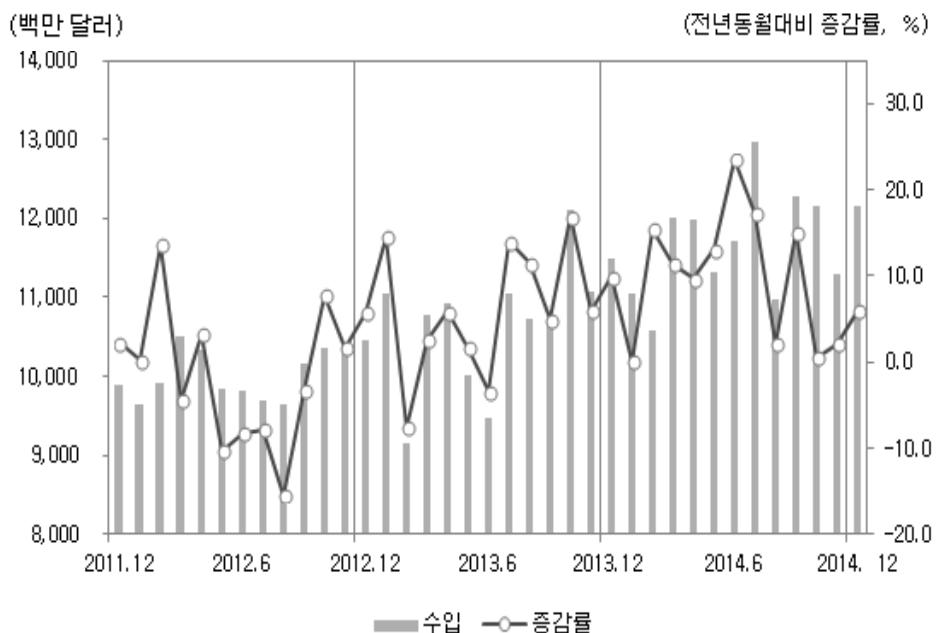
■ 서울의 12월 수출 1순위는 자동차부품, 수입 1순위는 자동차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은 자동차부품이 511백만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합성수지, 반도체, 편직물, 고무제품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은 자동차가 859백만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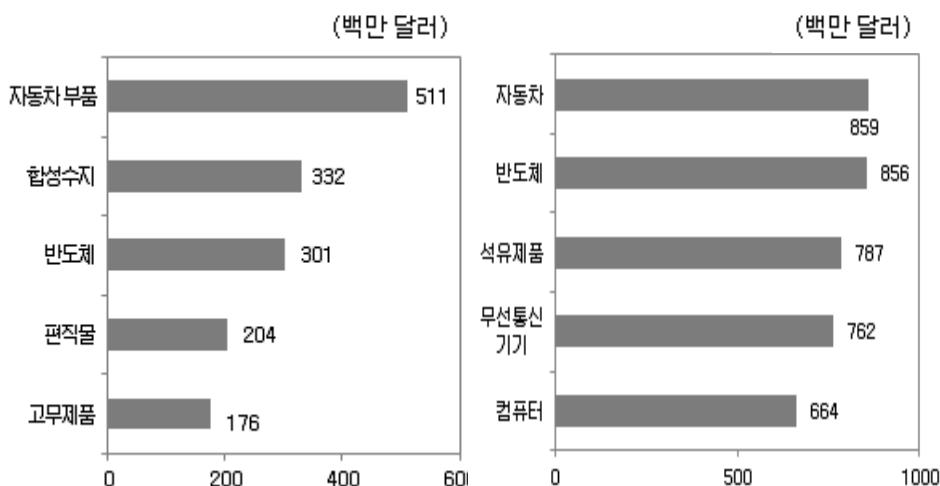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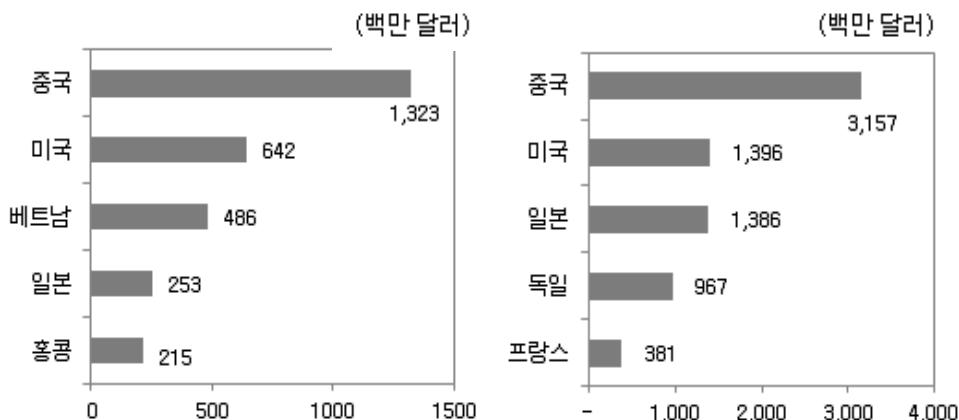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12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12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 서울의 12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은 중국이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한 1,323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은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순
- 대 베트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3.7% 급증했으며 미국으로의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21.9% 증가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은 중국이 전년 동월 대비 23.9% 증가한 3,157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순
- 대 프랑스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94.8%라는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독일로부터의 수입도 전년 동월 대비 36.0% 증가



자료 : 무역협회

<그림> 12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12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 자 · 료 · 출 · 처 |

경인지방통계청, 「2014년 12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4년 12월 서울시 고용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4년 12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garak.co.kr/youtong>」

관세청, 「2014년 12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동향」

국민은행연구소, 「2014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부동산114, 「2014년 12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중소기업청, 「2014년 12월 중 신설법인 동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http://stat2.smiba.go.kr>」

통계청, 「2014년 12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2014년 12월 고용동향」

통계청, 「2014년 12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kr>」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네트워크, 「<http://stat.kita.net>」

한국은행, 「2014년 12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

한국은행, 「2014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

SEOUL ECONOMIC BULLETIN

경제통통

FOCUS

- 서울시 전국최초 생활임금 시행, 올해 시급 6,687원으로 확정
- ‘공공일자리 신 모델’ 뉴딜일자리 1,387개 시민에게 제공

ZOOM IN

- ‘취약계층 노동자 집중지원’ 서울노동권익센터 문열어

HOT ISSUE

- 인터넷쇼핑 1회 지출, 해외직구 15만 9천 원, 국내 7만 원
- 금융산업육성조례 제정 시민공청회 개최…금융중심지 구축 ‘밑거름’

PHOTO@NEWS

- 서울시 기술교육원 수료식 /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민생침해모니터링단 위촉식

김가영(서울시 경제진흥본부 gykim@seoul.go.kr)

| 서울시 전국최초 생활임금제 시행, 올해 시급 6,687원으로 확정

서울시는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서울형 생활임금제」의 올해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했다.

• 올해 최저임금 5,580원보다 1,107원(20%) 많아, 월급 환산 시 137만 9,583원

시급 6,687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보다 1,107원(20%)이 많은 금액이며,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 시 월급은 137만 9,583원이다.

「3인 가구 기계지출 모델」

3인 가구 평균 지출 값(주거비·식료품비 등)의 50%(평균지출 50% 수준 이하의 삶은 빈곤하다고 가정)에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주거비(3인 가구 최소주거기준 36㎡의 전월세 실거래자료 중위 값)', '서울 평균 사교육비 50%'를 합산해 최저생활보장에 필요한 기계지출 수준을 도출

- ▶ 이를 3인 가구원 수의 월 총 노동시간 365시간(맞벌이 부부 1인: 日 8시간 전일제/1인: 日 6시간 파트타임)으로 나눠 산출한 값(시급 6,582원)에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률(1.6%)을 반영

(서울시 평균 가구원 수 3인(맞벌이부부 2인+자녀 1인)'기준)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이은 박원순 시장의 ‘경제 민주화정책 시즌 2’로, 앞선 정책이 고용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면 생활임금제 도입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를 해소해 노동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올해 1단계로 시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채용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지난해 시급 6,582원을 적용하면 대상인원의 266명이었는데, 2015년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대상인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들에 대해 선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16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우수 기업을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공공일자리 신 모델’ 뉴딜일자리 1,397개 시민에게 제공

서울시가 청년·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뉴딜일자리 1,397개를 3월부터 제공한다.

뉴딜일자리는 과거 취약계층 생계보호라는 사회안전망 역할에 중점을 둔 한시적·임금 보조적 공공일자리를 개선한 새로운 개념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하는 동시에 시민 일자리 제공과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진입을 돋고 있다.

· 사회서비스형 / 경력형성인턴형으로 분류, 청년/여성/장애인 등에 다양한 일자리 제공



참여유형별로 살펴보면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컨설팅을 해주는 ‘서울에너지복지사’, 민생침해 현장을 점검하는 ‘민생호민관’과 같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10개)과 업무역량을 쌓아 취업 및 창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력형성인턴형(18개)으로 나눌 수 있다.

대상별로는 청년마케터, 시립미술관 전시큐레이터, 청년혁신활동가 등 청년일자리(600개), 아동시설 아동돌봄도우미 등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여성일자리(200개), 올해 처음으로 모집하는 청각장애인 CCTV모니터링요원과 같은 장애인일자리(12명)가 있다. 이외에도 시민 일자리설계사,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사, 민생호민관과 같은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취업취약계층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585개)도 제공된다.

한편, 서울시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소지자 및 기업체 인사노무분야 경력자로 구성된 ‘뉴딜일자리 매니저’ 12명을 선발해 현장에 배치해 구인기업 발굴 및 취업정보 제공, 직업역량교육 등 참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상담을 실시해 진로설계도 지원한다.

28개 뉴딜일자리 사업에 대한 모집·선발은 2~4월 중에 사업별로 진행되며, 18세 이상 서울 거주 시민으로 실업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면 기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job.seoul.go.kr, 전화 02-1588-9142) 및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

| ‘취약계층 노동자 집중지원’ 서울노동권익센터 문열어

저임금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 여성·청년·이주노동자 등 스스로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노동권익센터가 문을 연다.

서울시는 종로구 율곡로(운현하늘빌딩 10층)에 총면적 264.46m² 규모의 <서울노동권익센터>를 개소하고 노동복지관련 컨트롤타워 및 광역허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노동복지 컨트롤타워이자 광역허브 역할, 노동서비스 전체 자치구로 확대해 사각지대 해소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이미 '11~12년 문을 열고 운영 중인 구로·노원·서대문·성동구 노동(근로자)복지센터와 통합하는 중앙 차원의 지원기관이다. 이 센터의 개소로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서비스해온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관련 상시적 상담도 전 자치구로 고르게 확대됐고 상주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필요할 경우 노동청 진정사건 대리 등 법률구제 지원도 할 수 있게 된다.

• 사후구제는 물론 시민들에게 노동존중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캠페인, 교육 등 실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노동 관련 지원 기관들이 사후구제 위주였다면 이 기능은 물론 시민참여 노동인권 캠페인, 노동환경개선 등 노동 관련 사전 예방과 교육까지 주력해 노동존중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노력을 다각도로 병행한다는 점이다.

당장 어려움에 놓인 취약근로자에게 상담을 실시해 해결책을 찾아주고, 이에 앞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높여 나가기 위해 노동인권캠페인 등을 통해 근본적인 노동존중의식을 시민들에게 심어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노동복지센터가 없어 교육 등이 어려운 지역은 직접 찾아가 노동 상담을 하고 시민노동법률학교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 인터넷쇼핑 1회 평균지출, 해외직구 15만 9천 원 · 국내 7만 원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2명 중 1명은 해외구매, 일명 해외직구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해외구매 1회 지출 비용은 평균 15만 9천 원으로 국내인터넷쇼핑 1회 지출금액인 7만 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최근 1년 이내 인터넷쇼핑몰 이용 경험이 있는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적을수록 인터넷쇼핑몰 이용 경험이 많았으며, 해외직구는 1년에 4회 정도 이용한다는 응답이 19.2%로 가장 높았다.

• 해외직구 평균지출 남성 16만 7,600원 > 여성 15만 5,200원… 의류·화장품 가장 많이 구매

남성의 1회 평균 지출비용은 16만 7,600원으로 여성 15만 5,200원에 비해 약 1만 2,000원가량 많았고, 40대의 평균 지출이 19만 4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구매를 통해 주로 구입하는 상품은 ▲의류·패션관련 상품과 화장품 ▲운동화 등 신발류 ▲식음료 및 건강식품 ▲생활용품·가전 등 통신기기 순이었다. 또한 이용자의 50.8%는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으며, 단점으로는 교환이나 환불절차 복잡(24.1%), 배송지연(26.6%), 반송 시 배송비 부담(15%)을 꼽았다.

• 해외직구 피해 작년보다 44% 증가… 27%가 언어적 문제 등으로 처리 포기

하지만 해외직구의 열풍과 함께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해외구매 인터넷 쇼핑관련 피해신고는 1,154건으로, 2013년 801건에 비해 약 44%가 증가했다. 피해품목은 의류·신발 등 패션관련 상품이 84.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피해유형은 계약취소·반품 관련이 38.6%(445건), 배송지연이 24.5%(283건), 운영중단·연락두절이 18.5%(213건) 순이었다.

해외직구 피해 소비자 중 64.6%는 구매업체에 연락해서 해결했고, 8.8%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26.6%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처리를 포기했다고 대답했다.



| 금융산업 육성조례 제정 시민공청회 개최…금융중심지 구축 밀거름

지난 2월 6일, 시민, 학계·업계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이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여의도 금융허브 조성 · 산업발전 추진 위해 시민과 전문가 한자리에서 의견 나눠



추진하기 위해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한데 모아 완성도 높고 신뢰성 있는 조례(안)를 만들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그동안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금융산업 발전은 물론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와 집적을 통한 금융 중심지 조성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여의도를 동북아 국제금융허브로 조성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적극

• 여의도에 금융기관 창업 · 외국금융기관 이전 시 고용보조금과 이전 비용 일부 지원

이번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는 금융기관의 유치 및 금융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지원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내·외 금융기관이 여의도(금융 중심지)에서 창업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이 지점을 신규 이전하고,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비용은 1인당 월 50만원 이내(최대 6개월)로 신규고용 기관별 2억 원, 교육훈련비용은 기관당 6천만 원이다. 또한 외국금융사의 여의도 이전 시 소요되는 사업용 설비설치 필요자금의 10분의 1이내(기관당 10억 원 한도)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한편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 중심지 구축기반 마련을 위한 자문을 수행할 국내·외 금융사 및 학계, 유관기관 등의 민관협의체 금융산업 정책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기술교육원 수료식이 16일, 23일, 25일에 교육원별로 개최됐다. 올해 수료생은 건축인테리어, 의상 디자인, 컴퓨터그래픽디자인, 그린 카정비 등 일반훈련 과정(주간 1년) 1,641명과 야간(6개월) 1,039명 등 총 2,680명이다. 수료율은 95%다.
<@일자리정책과>



일상에서 느낀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전문가들이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완성된 아이디어로 만들어주고, 이 아이디어를 다른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인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위키서울」이 13일 열렸다
<@사회적경제과>



대부업·임금 체불·취업사기 등 시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행위를 꼼꼼하게 감시하고 적발하는 동시에 예방 캠페인도 펼치는 ‘민생침해 모니터링요원’ 80명이 2월 9일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민생경제과>